

약술회의 종서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개원 11주년 기념학술회의(2002. 4. 9) 발표 논문집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행 사 일 정>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 축사: 김인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기조연설: 김형기 (통일부 차관)

14:30~16:00 북한체제의 현주소

- 사회: 이숙자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 발표: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
서 강성대국론으로”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정치: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오승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16:00~16:20 Coffee Break

<행 사 일 정>

16:20~ 18:00 **토 론**

● 제1주제: 안찬일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백인학 (강원대학교 교수)

● 제2주제: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류길재 (경남대학교 교수)

● 제3주제: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정형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8:00~ 19:30 **만 찬**

차 례

학술회의 총서 2002-01

- ◆ **기조연설: 김형기(통일부 차관)**

- ◆ **발 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소장)

“북한의 정치: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
오승렬(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 ◆ **토 론: 안찬일(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백인학(강원대학교 교수) /
김영수(서강대학교 교수) /
류길재(경남대학교 교수) /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
정형곤(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기 조 연 설

김 형 기
(통일부 차관)

존경하는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님, 김인수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의 발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먼저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통일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통일 및 북한 연구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 특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가 정상복원의 출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체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그 결과는 당면한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이제 남북관계는 대립과 불신의 관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실질협력관계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이번 특사파견을 계기로 소강국면이 해소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핵사찰문제·미사일 모라토리엄 등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측의 특사파견은 이러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함께 현안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다른 회담형식보다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 최고당국자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특사형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번 방북기간중 우리측 특사는 5시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금번 특사방북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의 양정상이 한반도 긴장조성 방지를 통한 평화정착의 공동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미대화 및 북일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일 적십자회담을 언급하는 등 대화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특사방북은 향후 핵사찰·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사회담의 두 번째 성과는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은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 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분야별 회담의 재개에 합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의 틀을 다시 가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외에도 새롭게 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조속한 연결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동과 서로 경제협력의 축을 이루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그 동안의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사방북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정상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며, 정상회담이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들어와서도 남북간에는 교류협력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인적·물적 교류가 계속 늘어나 물적 교류의 경우, 금년 2월까지 5,614만불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5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의 인적 교류는 1,79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가 늘어났으며, 남북간 경협사업도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된 WFP를 통한 10만톤의 대북 옥수수지원이 4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고, WHO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관련 치료제와 진단장비가 지원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킴으로써,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민족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북한은 지난 1월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당국간 대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신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대북강경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한반도에 냉기류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정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미국은 ▲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고, ▲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및 북한체제를 비판한 데 대해, 체제의 특성상 선뜻 대화로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사파견은 북한에게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4대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견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특사방북성과를 토대로 ① 경의선 연결사업, ② 개성공단 개발사업, ③ 금강산 육로관광, ④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등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의선 연결사업은 군사당국자 회담을 재개하여 「철도·도로 군사보장 합의서」를 서명·교환하고, 빠른 시일내에 비무장지대내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북측구간의 공사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6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한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에서, 북측에 대해 우리의 지원대책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북측의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바, 지난 1차 경협추진위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가동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개발은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전력, 가스 등은 남측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당면하게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입니다.

남북은 현재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CBM)조차 형성되지 않아 군사적 긴장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남북의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이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문제를 협의하여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①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② 미·일 등 유관국과의 국제적 공조체제 유지, ③ 북한의 호응 유도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째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특사회담과 같이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일 등 유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민족공조와 국제협력은 서로 모순되는 양자택일적 개념이 아니며 상호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입니다.

따라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함께 진전될 때, 우리의 당면목표인 남북간 평화공존에 보다 확고히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일 정책조정회의(TCOG)는 한·미·일 공조의 유효한 틀이며, 이번 도쿄회의는 특사방북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화추진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문제입니다.

북한도 변화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화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체제존립에 대한 우려 없이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

건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토대 위에 공존공영하자는 것은 자유와 평화의 확대라는 역사의 발전방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무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대립과 불신 그리고 화해와 협력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얼마간의 우여곡절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년에 남북간 화해협력 관계를 보다 확고히 진전시켜 차기 정권이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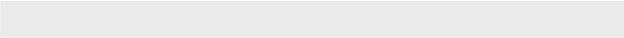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고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체제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열리는 통일연구원 개원 11주년 학술회의가 보다 수준 높은 북한 인식의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연구 및 통일정책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온 통일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소장)

< 요 약 >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그 동안 매우 중요한 통치이념이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북한 당국이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이념이며 영생불멸의 사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지배이념 및 통치이념이기 때문에 통치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변화하였고, 지도자도 세대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 주체사상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도부 수준에서 뿐 아니라 주민들 수준에서도 동시에 주체사상은 그 의미와 기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1. 주체사상의 기능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의 의미를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의 인간중심론의 측면은 보편적인 인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구적 인본주의 및 개인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주체사상은 그 이론의 본질에 있어서 인본주의이며, 개인주의적 요소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정책이 주체사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해석을 촉진하고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2 북한체제의 현주소

명제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상적으로는 좋은 사상이지만 좋은 사상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은 이제 체제로부터의 이탈의 이론적 근거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명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사회 통제 능력에 따라서 혁명의 이론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학생운동의 변혁이론으로 기능했던 것은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보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피지배집단의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체제 내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로는 동독 붕괴 당시의 시민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독에서 사용된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국민복지를 위해서!’ 등이다. 동독의 시민들이 1989년에 체제에 저항하여 쫓겨났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또는 “We Are the People”이다. 이 외침의 의미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당국이 수없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인민이니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인노릇을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혁명적 구호로 전변된 것이다.

지배자들이 허위의식으로 사용하던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자들이 그 이념을 현실로 실현하자고 집단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지배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혁명적 구호로 되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는 그 동안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역할을 하였으며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동독체제를 전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역기능화와 더불어 지도부에서는 주체사상을 퇴조시키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일지도이념이라고 규정된 주체사상이 동원되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개념의 정치구호 및 이념체계가 형성되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붉은기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이 그 대안적인 것들이며 특히 강성대국은 이제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첫째,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 김정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모두 김일성 사후에 나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사상 대신 새로운 정치구호가 요구된 것은 식량난이라는 큰 위기적 상황에서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이후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상징하는 사상으로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연한 정책변화를 기도한 김정일 정권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를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체사상은 이미 개인주의적 일탈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작용하는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황장엽씨가 남한으로 귀순한 것은

4 북한체제의 현주소

자신이 만든 주체사상의 인본주의적 속성이 북한체제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통치이념의 세대교체: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1998년 가을에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았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수정 헌법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기 바로 직전인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하여 ‘강성대국’론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정치에서 행한 역할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국정목표이자, 미래의 비전이며, 통치이념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이념체계로 제시되었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시대를 맞아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강성대국론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1997년의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황장엽의 탈북과 남한 귀순이 주체사상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북한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넷째,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군부를 무마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군정치에 잘 부합하는 통치이념이 강성대국론이다. 강성대국론은 선군정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상위개념이다.

4.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의 관계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에서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통치이념이나 아니면 주체사상이라는 큰 지배이념(dominant ideology)아래의 하나의 하위 통치이념(ruling ideology)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이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의 취지를 설명할 때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설계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새 지배이념으로 해석되고, 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주체사상의 아류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은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새로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선군정치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4대제일주의 중의 수령제일주의와 군대제일주의도 주체사상의 인민대중중심의 개념과도 상치된다.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일탈행위의 사상적 근거로 활용되고

6 북한체제의 현주소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수를 급격히 줄이고 대신 강성대국론을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단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통치이념도 세대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자 할 때 주체사상이 동원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류 통치이념의 자리는 이미 강성대국론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5. 주체사상의 새로운 기능

주체사상의 역할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은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서 재 진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소장)

I. 서 론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그 동안 매우 중요한 통치이념이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북한 당국이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사상이며 영생불멸의 사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흔히들 북한체제 유지의 최대의 버팀목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거명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지배이념 및 통치이념¹⁾이기 때문에 통치상황의 변화와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변화하였고, 지도자도 세대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 주체사상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도부 수준에서

1) 지배이념(dominant ideology)은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에 대하여 헤게모니, 즉 철학적 도덕적 지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이념체계인데 반하여, 통치이념(ruling ideology)은 지배이념의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지배집단의 지배 및 통치의 수단으로서 구호적 수준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지배이념으로까지 발전된 사상이며, 강성대국론은 통치이념의 구호이다.

8 북한체제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주민들 수준에서도 동시에 주체사상은 그 의미와 기능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주체사상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새롭게 연구하도록 하는 몇가지 새로운 변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경제난에 기인한 체제위기 속에서 주체사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가 하부구조, 이념이 상부구조를 구성하며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맑스주의의 명제를 따른다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온전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이념의 담지자는 바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념은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근거를 경제에서 찾곤 하였다. 북한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 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²⁾라고 주장했으며 우월성의 한 증거는 경제적 복지에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권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행한 연설에서도 김정일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해설서³⁾에서도 “사람이 살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향유해야 하며 그래야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며 활동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도 빨리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곧 북한식 사회주의 그 자체를 정당화해 주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본다면 경제난이 지속되는

2) 김정일,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3) 조선로동당출판사, 「사람중심의 사회주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82.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의 논리는 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지가 핵심적인 사회학적 관심이다.

둘째,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수반으로 취임한 1998년 9월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서 주체사상의 위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은 언급되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에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등의 새로운 구호로 대체되고 있으며 1998년 이후에는 강성대국론이 배타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강성대국론에 의하여 통치이념으로서의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가?

셋째,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 겸 주체사상연구소장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함으로써 황장엽 자신의 글⁴⁾이나 증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주체사상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는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황장엽의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글은 주체사상이 1950년대 김일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황장엽에 의하여 새롭게 개작된 과정, 김정일에 의하여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형된 과정,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의 와중에서 주체사상이 새로운 개념들로 변용된 과정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주체사상의 개념의 변화를 개관해 본다. 그리고, 식량난 이

4) 황장엽이 탈북 이후 집필한 책은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인간중심철학의 몇가지 문제」(서울: 시대정신, 2000); 「인생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서울: 시대정신, 2001); 「사회역사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서울: 시대정신, 2001); 「세계관: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 III」(서울: 시대정신, 2001) 등이다.

후 주체사상이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1998년이후 강성대국론이 등장한 배경과 주체사상의 위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II. 주체사상의 전개과정⁵⁾

주체사상의 형성 및 발전을 네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내용도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김일성 정권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던 단계, 둘째, 황장엽이 인간중심의 사상을 도입하여 이전의 주체의 개념을 전면 개작한 단계, 셋째, 인간중심주의 주체사상이 수령절대주의의 사상으로 변화되는 단계, 넷째, 사회주의권 붕괴의 와중에서 정권위기에 직면하자 앞의 세단계의 개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던 단계이다. 끝으로 1998년에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제시되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단계이다.

1. 50~60년대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주체사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체라는 개념의 핵심내용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노선이다. 즉, 소련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 숭배 배경과 수정주의와 같은 흐름을 북한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서는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5) 이 논문은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체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책을 참조할 것.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며 대외적 자주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반사대주의로서의 주체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김일성정
권에 대한 도전이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제기되었던 때이다. 대외적으로
는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에 스탈린 격하운동
과 함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수정주의
의 물결이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6.25전쟁의
실패의 책임, 개인숭배, 경제발전전략 등을 둘러싸고 김일성에 대한 정
적들의 도전이 비등하던 시기였다. 김일성은 ‘주체’를 명분으로 소련과
동구의 수정주의 바람을 배격하고, 소련과와 연안파 등의 정적들을 숙
청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대국을 등에 업은 정적들을 타도하는 소도구로 활용되었던 주체의
개념이 대외적 자주노선의 ‘사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이후
에 전개된 새로운 대외적 도전 때문이었다. 대내적으로 주체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정적들을 타도하던 김일성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중소이념분쟁과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도 자주노선을 표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 70년대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황장엽의 역할

김일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주체사상은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철
학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원리로 대체되었다.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의 세

계관을 핵심내용으로 개념화되었다.

첫단계의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전제로 한 사상이라면 황장엽의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이다.

황장엽이 인간중심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내게 된 계기는 김일성대학 총장시절이던 1966년에 필화사건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게 된데서 시작되었다. 필화사건에서 벗어나 김일성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새롭게 개발하였던 것이다.⁶⁾

인간중심론의 이론적 근원은 서방세계에서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온 사상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가령, 황장엽의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은 서양에서는 오래 전 1880년대에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것들이다. pragmatism으로 알려진 John Dewey의 이론이 그 중의 하나이다.⁷⁾ 존 듀이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특징을 가지는 것은 min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mind란 사유능력이며, 이 사유능력은 인간이 주변환경을 분석하고 상황을 정의하여 행동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존 듀이는 이 사유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조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황장엽은 인간중심론의 이론을 주체사상과 연결시키게 된 아이디어는 1959년 이후 전개된 생산경쟁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얻었다고 증언하였다. 황장엽에 의하면 천리마운동은 단순히 생산이라는 하나의 목

6)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 155.

7) John Dewey, *Human Nature and Human Conduct* (New York: Henry Holt, 1922). 이러한 생각의 첫 언급은 John Dewey, *Psychology* (New York: Harper Brothers, 1886).

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즉 생산과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을 만듦으로써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천리마 운동의 밑바탕이 된 사상은 군중노선이었다. 군중노선이라는 개념은 중국공산당에서 벌어진 것인데 당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하나로 뭉치게 하고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황장엽은 이 천리마 운동에 이론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황장엽은 이 운동을 통하여 인간교양과 경제발전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군중노선을 기초로 하여 주체사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⁸⁾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군중노선을 포괄하는 ‘동원의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당시 북한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이었는데 이 두가지 지도노선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별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황장엽이 ‘주체는 곧 군중’이라는 관점에서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군중이라는 식이다. 당시까지 self-reliance라는 개념으로 쓰던 주체라는 말을 subjecthood 또는 lord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황장엽이 만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로서 군중노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논리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self-reliance와 subjecthood라는 상이한 개념들이 주체라는 하나의 우리말 글자로 담

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 134~135.

겨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이 이전의 맑스-레닌주의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맑스주의의 유물론을 뒤집어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맑스의 유물론이 토대가 상부구조와 사람의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로 정의될 수 있다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물질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능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사상이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기왕의 교리를 버리고 정신이나 의식의 능동성을 내세우는 관념론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황장엽은 주체사상이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추진하여 나가는 주체를 계급이 아닌 인민대중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가장 크게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3. 70~80년대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과 김정일의 역할

주체사상 발전의 셋째 단계는 주체사상의 개발이 황장엽의 손을 떠나서 김정일의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전개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강화하고 대를 이은 충성을 유도하는 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 단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실세로 전면에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선전선동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북한 역사와 정책을 주체사상의 논리로 일색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김일성의 61세 생일을 맞는 1973년 4월호 「근로자」에 실린 주체사상에 대

한 특집기사이다. 『근로자』 4월호에 실린 8편의 논문 모두가 주체사상 관련 논문이다. 주체사상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부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 실린 논문은 모두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최초로 담은 1972년 9월의 논문을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역사와 정책을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김일성의 가계, 항일무장투쟁, 토지개혁, 농업협동화, 통일문제 등 북한의 과거사와 현재의 주요 정책노선을 모두 주체사상의 논리로 재해석하였다. 소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이다.

김정일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첫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사회유기체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수령-당-대중이라는 사회주체 중에서 수령이 뇌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둘째는 ‘혁명의 주체’의 개념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이전의 명제를 변경하고 대신에 역사의 주체로서 수령의 역할을 도입하였다.

김정일이 주체사상 개발의 주도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의 개념에서 수령중심으로 바꾼 이유가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발전의 탄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김정일의 등장과 자신의 권력승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치이념과 권력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다.

4. 80~90년대 우리식 사회주의 구호하의 주체사상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권이 변혁의 격랑에 휩싸이게 되자 북한 지도부는 50년대처럼 수정주의와 사대주의를 경계하고 문호를 굳게 닫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인식은 곧 지도부의 담화에 반영되었으며 주체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나온 주체사상은 이전에 나온 세가지 주체사상이 모두 혼합되고 조합된 형태로 나왔다. 이전에 나온 주체사상 발전의 세단계의 각 핵심 개념이었던 반사대주의, 인간중심론, 수령중심론이 모두 조합되는 형태로 나왔으나 그 기조는 반사대주의의 색깔을 질게 띄었다. 반사대주의 개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발전되었고,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은 모두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의 틀 내에서 변용된 개념들이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강성대국론은 새로운 통치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Ⅲ. 주체사상의 기능변화: 통치이념에서 저항이념으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정치위기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김정일의 권력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기능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란 지배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기

능변화는 그 싹이 자체의 이론에 배태해 있었으며, 암시장의 성행과 정부의 자력갱생 정책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1.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개인주의 이론의 요소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네가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네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양의 교과서로 1990년 펴낸 포켓판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의 첫페이지의 첫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⁹⁾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주요 문건에서도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사실이 가장 많이 강조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 학설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다.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⁰⁾

9)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용어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 12.

1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주체사상학습참고자료』 책자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에는 수령론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다. 수령론은 항상 두 번째 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바로 인간중심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는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자기운명을 개척해 가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암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말은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은 보편적인 인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구적 인본주의 및 개인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주체사상은 그 이론의 본질에 있어서 인본주의이며, 개인주의적 요소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통치이념인 집단주의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에서 인민대중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민대중이라고 주장하였다.¹¹⁾ 그러나 이러한 주석은 개인들에게는 별 설득력이 없다.

북한지도부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주민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을 높여서 정치와 경제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했

11)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4), p.56.

지만, 주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말을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인식은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2. 자력갱생 개념의 변화와 개인주의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북한은 “강행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과거 국가차원의 경제발전 정책으로서의 자력갱생을 개인 생계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 붕괴에 따른 귀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게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기주의가 발호하는 체험을 하고부터는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북한당국이 경제난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정책과 맞물려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에 있어서 집단주의가 퇴조하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¹²⁾ 또한 독고순의 연구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을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의 정도를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의 가치지향을 간접적으로 추론

12)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1995), 제9장 “사회생활의 변화: 집단주의적 원칙 대 사적 자율화” 참조.

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의 속성은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간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개인주의에서도 비슷하나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로 나누어 볼 경우, 남한주민은 수평적 개인주의에 가깝고, 탈북자들은 수직적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란 권력과 서열에 대한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직적 개인주의는 보다 경쟁적인 성향의 개인주의를 의미한다.¹³⁾

3.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주체사상의 역기능

주체사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요소와 북한 당국의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의 강조 등이 맞물려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공감을 상실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상적으로는 좋은 사상이지만 좋은 사상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원리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치현실과는 정반대라고 본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당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노동당과 수령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¹⁴⁾

사람위주의 사상이며 사람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이 굶어죽고, 총에 맞아죽고, 잡아 가두기도 하는 등 폭력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등 현실과 안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¹⁵⁾ 자주적 인간이라고

13)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pp. 130~138.

14) 서철0 (철도국 신호원, 1998. 11. 30 탈북) 증언.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간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주적으로 생각해도 표현은 못하며, 표현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한다.¹⁶⁾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 자기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교육되고 있지만 현실은 인민 모두를 얽어매어 놓고 있으며 체제에 희생되는 것이 인민대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민대중에 의거한다고 해놓고 정권은 인민대중을 멀리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래서 망했다는 인식도 있다. 너희가 주인이니까 너희가 하라고 해놓고 실제 정책집행은 자기네 간부들이 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 위에서 다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상과 현실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북한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호불호의 평가는 “주체사상 하면 짜증이 난다”는 식이다. 눈뜨면 주체사상을 교육하니 지겹고 짜증난다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사상교양 시간에 강연자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무릉도원의 나라”라고 말하면 청중들이 ‘와!’ 하고 웃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주체사상은 이제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평생 배워준 것이 주체사상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써 먹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인식한 북한주민들은 이제 개인차원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체사상은 의식성, 창발성,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획득하

15) 차민0 (병원초급당비서, 2000년 귀순) 증언.

16) 이국0 (35세, 운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증언.

17) 김홍0 (함북운성 기계공장 자제인수원, 36세, 1999년 귀순) 증언.

고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성, 창발성, 자주성을 발휘해서 각자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평생 배운 주체사상을 주민들이 접수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사상, 오직 자기밖에 믿을 수 없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은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갑: 왜 식량배급이 안나오지?

을: 나라에서 갖다 주기 바라나?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데 나라에서 갖다주기 바라나?

갑: 요즘 어떻게 사나?

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 아니냐? 주체사상 있지 않느냐? 나라에서 갖다주기 바라나? 18)

이처럼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명제를 암시장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빚대어서 하는 말이다.

셋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은 이제 체제로부터의 이탈의 이론적 근거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명제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 의미 그대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호송되는 도중 탈출에 성공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한 탈북자는

18) 이국0 (운성기계수리공장, 강제노동단련대 대열지도원, 37세, 2000년 탈북) 증언.

주체사상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도문에서 기차에 실려 평양으로 호송되는 도중 갑자기 주체사상의 “나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는 구절이 생각났으며, “내가 나의 의지에 반하여 붙잡혀 갈 필요가 있는가? 혹시 도망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는 사력을 다하여 도망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⁹⁾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이 명제가 역기능을 낳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체사상 교양할 때 이러한 내용은 강조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주로 거론된다고 한다. 가령,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김일성이며, 주체사상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은 어떠한지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한 교양은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실질적인 사상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한다. 인간이 사회적 인간인 만큼 수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고 나아가는 수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나아가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버리면 죽음이요 지키면 살 수 있다, 절대로 사회주의를 버리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주로 강연한다고 한다.²⁰⁾

4. 주체사상의 개념에 포함된 혁명이론적 요소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주체사상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명제는 향후 북한체제의

19) 이진0 (군훈련소 예술선전대 작가 겸 연출자, 1995.9 탈북) 증언.

20) 위의 증언.

사회통제 능력에 따라서 혁명의 이론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는 주체사상이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만이 아니라 힘든 노동과 낡은 사상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사상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로서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그 방도란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수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주장했다.²¹⁾ 이런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혁명사상이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주체사상은 불멸의 빛나는 사상이며 착취와 압박, 부정의를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적 사상”²²⁾이라는 이 명제는 혁명사상에 가까운 명제이다.

여기서 때려 부셔야 할 ‘낡은 사회제도’란 물론 일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제도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혁명적 주체사상에 대한 명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현재의 북한체제가 과거의 일제식민지에서 북한인민을 해방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나 과거의 이야기이고 현재에는 현재의 체제가 북한주민을 착취하고

21) 금성청년출판사,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 용어해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p. 17~18.

22) 김영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근로자』, 1975년 10호, p. 78.

압박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체사상이 이전 체제의 잔재를 낳은 체제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체제를 낳은 잔재로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남한에서 주체사상이 일부 대학생들의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활용된 적이 있듯이 북한에서도 향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체사상이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남한의 주사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주체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남한의 주사파 학생운동

주체사상이 남한에서 학생운동의 변혁이론으로 기능했던 것은 북한 당국의 시각에서 보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피지배집단의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이 변혁운동의 이론으로 사용된 배경은 주사파 학생운동에 주체사상 이론을 공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의 증언에 의하여 잘 드러났다.²³⁾ 김영환에 의하면 1985년 하반기부터 학생운동이 반미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부합하여 순식간에 학생운동의 대세로 되었다고 한다. 이 반미학생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확립할 필요를 느껴서 이론적 자원을 찾던 중 주체사상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체 의식과 인본주의를 강조하던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내용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23) 김당, “김영환은 김일성 만난 후 전향을 결심하였다,” 『신동아』, 1999년 10월호; 김당, “김일성도 주체사상 모르더라,” 『신동아』, 1999년 11월호; 김영환, “강철서신 김영환의 반성문” <http://my.netian.com/~csi1001/unity.html>.

대남방송인 평양방송과 민민전에서 주체사상강좌 등 주체사상 관련 내용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²⁴⁾ 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남한 학생운동의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중의 일부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내용과 초기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인 자주의 개념이 주요 주제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영환은 1986년부터 대학가에 자신의 저서 『강철서신』을 배포하여 운동권 주류 NL계열중 상당수를 주사파로 변신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주사파 운동가의 일부가 북한을 반대하는 쪽으로 태도변화를 하게 된 배경은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이론과 북한의 실제 현실간의 차이를 확인한데 있다고 한다. 김영환과 그의 동료 조유식은 1991년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하고 북한의 실태를 직접 확인한 뒤부터 점차 주체사상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인민의 자주성을 외치는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도 인민의 자주성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체류 중 북한의 당간부들이 하급관리나 일반주민들에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그들에게 단지 지배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체사상의 대부로 알려진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90년대에 쏟아져 들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증언들이 대체로 진실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강철환과 안혁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기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²⁵⁾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24) “『유시민의 세상읽기』, 주사파를 생각한다,” <http://my.dreamwiz.com/2000baby/you/sesang/0913.htm>.

25)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북한주민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은 이골이 나게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남한대학생이 북한에서 느끼는 것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도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느끼고 있으며 점차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같은 체제내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사례: 동독 붕괴 당시의 시민운동

지배이데올로기가 자국 내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사용된 예는 동독의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독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원리에 따라 인민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동독에서 사용된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인민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국민복지를 위해서!’ 등이다. 동독의 시민들이 1989년에 체제에 저항하여 쫓겨났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 “우리가 인민이다”, 또는 “We Are the People”이다.²⁶⁾ 이 외침의 의미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당국이 수없이 주장했듯이 우리가 인민이니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인노릇을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주인노릇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주인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혁명적 구호로 전변된 것이다.

지배자들이 허위의식으로 사용하던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자들이 그 이념을 현실로 실현하자고 집단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지배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혁명적 구호로 되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

26) 마를리스 멩게 지음, 최상안 옮김, 『동독의 통일 혁명: 우리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을유문화사, 1990), p. 215.

민이다”라는 구호는 그동안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역할을 하였으며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결국 동독체제를 전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동독의 시민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We Are the Same Nation”이라고 외치면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장벽을 넘었을 때는 그 구호는 동서독이 통일 되는 혁명적 구호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가 지배자에 의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허위의식이었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혁명적 구호로 전변되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인노릇을 해왔던 지도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주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를 언제, 집단적으로 외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그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IV. 통치이념의 세대교체: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1. 주체사상 퇴조의 배경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변화와 역기능화와 더불어 지도부에서는 주체사상을 퇴조시키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사상이 동원되는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개념의 정치구호 및 이념체계가 형성되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붉은기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이 그 대안적인 것들이며 특히 강성대국은 이제 주체사상을 대

체하는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80년대 말에 이미 주체사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개념들을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으로는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에 미흡함이 있다는 것을 북한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주체사상의 틀 내에서 변형된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주체사상이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본 대로 김일성 사망이후 나온 새로운 정치구호들은 주체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체사상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후퇴시키고 있는 까닭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주체사상의 역기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의 설득력을 훼손시키는 대내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 김정일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치구호를 모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등이 모두 김일성 사후에 나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사상 대신 새로운 정치구호가 요구된 것은 식량난이라는 큰 위기적 상황에서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한 이후 반사대주의 개념의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체사상이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 자립노선, 또는 반사대주의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는데 식량을 국제사회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의 명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주체사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의 경직

성을 상징하는 사상으로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연한 정책변화를 기도한 김정일 정권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체사상은 이미 개인주의적 일탈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작용하는 등의 역기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귀순한 것은 자신이 만든 주체사상의 인본주의적 속성이 북한체제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사상은 기능부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대기근의 시대에서 이전 시대의 이념으로 사회통합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노동의 동원 이데올로기가 무의미해졌으며, 주체사상으로는 식량위기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주는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넷째,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행했던 기능은 북한체제 자체의 구성원리라기 보다는 정책의 지도이념이었으며 자주노선, 폐쇄주의, 자력갱생, 군중노선 등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분식으로 작용했던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구성원리는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의 근간은 맑스-레닌주의이지 주체사상이 아니다. 북한체제의 구성원리인 맑스-레닌주의는 주체사상 때문에 묻혀있는 셈이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체사상은 언제든지 다른 대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체사상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붉은기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등의 구호가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붉은기 사상'의 등장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후 주체사상 대신에 새로운 통치이념을 만들고자 하는 흔적이 엿보인다. '붉은기 사상'이 그 첫 번째 시도이다. 붉은기 사상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하여 붉은 마음을 바쳐 충성하자는 사상으로서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수령 결사옹위 정신'이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 8월 28일 「붉은기를 높이들자」라는 「로동신문」, 「정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본격적인 통치구호로 격상되었다. 1996년의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이다. 대체로 북한의 신년사 또는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이 당시의 가장 중요한 통치이념이나 통치구호임을 고려할 때 붉은기 사상은 주체사상의 반열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통치구호이다.

붉은기 사상은 1997년과 1998년 공동사설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1997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것은 온 사회를 우리당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1998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의 주체사상이 행했던 역할을 3년간 대행하였던 셈이다. 대신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체사상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3. 강성대국론의 등장

붉은기 사상보다 더 본격적인 통치이념으로 구상되어 제시된 것이 ‘강성대국’ 구호이다. 1998년 가을에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았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채택한 수정 헌법이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기 바로 직전인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하여 ‘강성대국’론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강성대국’론이 당시의 내용과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정치에서 행한 역할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공식적인 김정일 시대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국정목표이자, 미래의 비전이며, 통치이념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이념체계이라는 것이 아래의 인용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새사회 건설,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의 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이다. (중략)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위에 어떤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 놓으실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은 상상도 못한다. ...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애국한생이 어린 이 땅위에 어떤 모습의 강성대국을 어떻게 일떠 세우시는가를.²⁷⁾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를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시대를 맞아 김정일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새로운 통치이념과 구호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또한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심화되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구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궁색하게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으로 변형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용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둘째, 강성대국론은 간부들과 주민들의 체제불안 심리와 동요를 진정 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국가로 발전될 것이며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8월 30일에 발사된 대포동1호 미사일을 강성대국론의 상징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이러한 의도와 일치한다.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이라는 구호를 하위구호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98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 데올로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강성대국, 듣기만 하여도 힘과 용기가 샘솟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슴 후련히 폭발시켜주는 이 한마디.²⁸⁾

27) 『노동신문』 정론, 1998. 8. 22.

28) 위의 글.

셋째, 강성대국론이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 1998년으로서 황장엽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1997년의 이듬해라는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황장엽의 탈북과 남한 귀순이 주체사상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북한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든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식인과 주민들 중에는 주체사상은 황장엽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은 식량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군부를 무마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군정치에 잘 부합하는 통치이념이 강성대국론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강성대국론이 선군정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상위개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시었던 것처럼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²⁹⁾

강성대국론이 통치이념으로 활용되었다는 증거의 하나는 강성대국론이 만들어진 그 이듬해 1999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으로 올랐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1999년의 신년공동사설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올해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오랫동안 무르익혀오신 강성대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를 전면적으로 실현해가는 역사적 진군”이라고 주장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각 년도의 신년공동사설에는 ‘주체혁명’, ‘주체위업’, 주체의 사회주

29) 위의 글.

의강성대국이라는 단어들도 한두 번 나타날 정도이며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에서만 ‘김일성혁명사상 강좌’라는 주제로 주체사상의 내용이 상세하게 방송되고 있다.³⁰⁾

특이할만한 점은 2002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이다. 전체 내용은 강성대국론이 주조를 이루면서도 김일성에 관련된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일성을 ‘주체사회주의’의 시조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사상제일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체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교육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체사상의 의미는 아직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이 2002년에 새삼 되살아난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신문에서도 주체사상의 위상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2001년 새해들어서 제시한 소위 신사고론으로 알려진 글을 보도한 노동신문 사설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³¹⁾에서 ‘주체’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강성부흥하자』라는 노동신문 정론은 전면기사로 나온 긴 글인데도 ‘주체의 사회주의 부흥강국’이라는 말 이외는 주체사상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강성대국이라는 말은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북한은 노동신문 2만호 발간기념일인 2001년 12월 1일에 게재한

30) 최근의 한 예를 든다면, “김일성혁명사상 강좌 154회,” 『평양방송』, 2001년 10월 3일 02:30시.

31) 『로동신문』, 2001. 1. 9.

사설의 제목이 「당의 붓대 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추동하자」이다. 강성대국이 가장 중요한 통치구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론이 아직 이론적 체계를 가진 이념체계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정권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사회통합과 사회동원의 구호로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4.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의 관계

지금까지 논의한 사실에서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대체한 새로운 통치이념이나 아니면 주체사상이라는 큰 지배이념(dominant ideology)아래의 하나의 하위 통치이념(ruling ideology)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이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이 강성대국론의 취지를 설명할 때 21세기 김정일 시대의 설계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새 지배이념으로 해석되고, 후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주체사상의 아류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강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은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새로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선군정치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4대제일주의 중의 수령제일주의와 군대제일주의도 주체사상의 인민대중중심의 개념과도 상치된다. 강

성대국론과 주체사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일탈 행위의 사상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수를 급격히 줄이고 대신 강성대국론을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단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강성대국론의 기능

강성대국 구호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부강한 이상향’으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동원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여 주력하고 있다는 김정일의 이미지 만들기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의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사상의식 개조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강성대국론은 경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우리는 어찌하여 강성부흥의 구호를 높이 휘날리게 되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신념과 애국애민의 의지!³²⁾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너무 괴리된 이미지이지만 원래 이데올로기는 대중들로 하여금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방식으로

32) “강성부흥하자,” 『로동신문』, 정론, 2001. 6. 8.

활용되는 경향이 크다.³³⁾ 북한이 『로동신문』 정론의 형식으로 발표한 『강성부흥하자』라는 글에서³⁴⁾ 유토피아 꿈꾸기의 예를 잘 볼 수 있다. 글의 도입부에서 “모든 것이 흥하는 나라, 왕성한 활력에 넘쳐 번영하는 사회주의 부흥강국을 건설하려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분출시키는 혁명의 나팔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의 엄혹함을 미래의 이상향으로 분식하였다.

과거에 김일성이 “이밥에 고기국”을 이상향으로 선전하였듯이 김정일은 사회주의 부흥강국, 강성대국을 새로운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성대국의 이상향을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경치좋은 산촌마다 샘솟는 온천물은 온천물대로, 샘물은 샘물대로 모두다 <복물>이 되어 양어장들에 메기가 펄펄뛰고 팔둑같은 칠색송어, 잉어, 송어가 식탁에 오르게 될 호뭇한 전망 ---

꽃과 나무들로 가득찬 거리마다 청신한 공기가 흘러넘치고 삼점과 식당, 현대적인 편의봉사망들에서 녀성들과 아이들, 청춘과 로인들의 함박꽃 같은 웃음 가득 차 넘칠 풍성한 생활의 향기가 호뭇하게 풍겨온다.³⁵⁾

무릉도원을 그리는 『로동신문』의 기사는 건조한 기사문체가 아니라 시적인 운율을 실어서 노래하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한은 단순히 근거도 없이 이상향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

33)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34) 『로동신문』, “강성부흥하자.”

35) 위의 글.

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거명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장미빛 분칠을 하여 설득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소금생산, 대흥단군의 감자농업, 메기양어장, 공장 설비 정보화, IT 산업 등이 강성대국의 성공사례로 선전되고 있다.

고난을 헤쳐온 우리 조국은 지금 새세기 부흥강국 건설자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있는가.

전설과도 같은 기적 - 부흥강성이다.

처절씩거리며 파도가 사뭇쳐 오는 동해기슭에 서보면 새로 생겨난 수백정보의 소금밭에서 흰눈 같은 소금이 쌓여지고 대흥단 삼천리벌에 서보면 흰쌀 같은 감자전분이 쏟아져 나온다. 공장에서 메기가 펄펄뛰고 컴퓨터조종체계로 하루에도 수만개의 닭알들이 생산되는 현실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중략)

조선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컴퓨터에 새겨나가는 나이 어린 수재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수록 고난을 헤쳐온 보람으로 우리마음 한없이 설레인다. 정보시대의 높은 령마루에 치달아 오르는 과학자들의 포부 하늘에 닿았고 우리 조선을 가장 아름답고 강성하는 나라로 가꾸어 갈 건축가들의 꿈에도 나래가 돋혔다.³⁶⁾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에 접목시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감을 조장하는데 기치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2001년을 기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정보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보기술산업을 북한의 주력산업으로 특화하여 북한의 경제를 희생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아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36) 위의 글.

6. 강성대국론과 김정일 개인숭배 내용의 변화

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이것이 북한의 마스터플랜이며 이 마스터플랜을 창시해낸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논리로 강성대국론과 정보산업론을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활용하고 있다.

2001년 초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투쟁 기풍,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신문과 언론은 그 모든 새로운 가치 지향을 김정일과 일체화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일을 정보기술산업의 지도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설계사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한가슴에 안으시고 영웅적 진군대오에 새 세기 진군의 신호 총성을 장쾌하게 울리시었다”고 주장하였다.³⁷⁾ 즉, 김정일은 정보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곧 ‘과학의 천재’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김정일의 이미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신해 왔는데 60~70년대에 권력승계를 준비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천재로, 70~80년대에 공식적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자로, 90년대 중반의 체제위기시에는 선군사상을 주도하는 ‘장군님’으로 선전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평가 중에는 영화에만 미친 사람, 군대나 찾아다니면서 인민들의 생활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아직도 공식교육에서 배운 대로 김정일을 평가하고 있는 계층이 있

37) 『로동신문』, 2001. 1. 7.

는가 하면 김정일이 경제난의 책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계층도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층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고위급 상층부 간부부터 밑의 노동자, 농민까지 하나로 맥이 통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간부들은 알면서도 현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니 외적으로 충성하며 노동자, 농민 하층은 고달프면서도 어쩔 수 없어 참는다고 한다.³⁸⁾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김정일 책임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김정일이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지도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을 경제난의 궁지에서 구해 내는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최고의 지도자, 과학의 천재, IT산업의 설계사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항일 빨치산 항전을 통하여 북한을 일제에서 구해내고 미제와 싸워 이긴 투사’ 김일성 이상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로 승격된 것이다. 다음의 구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최단기간 내에 발전된 과학기술 강국으로 전변시킬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과학발전에 전당,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³⁹⁾

38) 임0신 (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 10 귀순) 증언.

39)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2000. 7. 4.

정보통신산업의 특화를 통한 경제회생 전략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북한의 간부와 일반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 이미지화 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언론이 정보기술산업에서 살길을 찾아냈다는 김정일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인류 과학 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비범한 예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놀라게 하는 깊은 과학적 식견, 한없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자자동화공학으로부터 화학과 생물학, 건설공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계신다. 첨단 과학의 정수로 되는 컴퓨터 분야의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시고 우리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명안을 제시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지의 비범성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 오늘 세계 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전자와 우주기술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모든 것에 그 어느 정치가보다 민감한 정치가’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⁴⁰⁾

북한에서 “새로운 사고방식, 투쟁기풍”이라는 것은 곧 김정일식으로 등식화된다. 노동신문 사설은 “오늘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 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식으로 살며 투쟁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면 사상과 지향뿐 아니라 투쟁기풍과 일본새까지도 장군님을 그대로 닮아야 한다”⁴¹⁾는 것이다. 김정일이 그

40) 위의 글.

41) 『로동신문』, 사설, 2001. 1. 9.

모든 것의 모범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북한의 언론은 몇 가지 사례도 예시하고 있다. 가령,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시대의 맛이 나는 현대적인 폐기공장, 가금기지를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는 과정에 혁명적 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작전하시고 대담하게 변혁을 이룩해 나가고 계신다”고 보았다.⁴²⁾ 먼 앞날을 내다본다는 것은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력산업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통이 크게 작전한다는 것은 단번에 첨단산업을 통하여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단번도약 전략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고 있으며 북한은 조만간에 ‘단번도약’을 이룩하여 경제난을 해결하여 강성대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의 시대에 경제문제의 지도자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 음 말

전체주의 체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가까운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개념이 지배이념으로 수용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이념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소련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대안적 통치이념이었기 때문임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

42) 위의 글.

이 이제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그 실용성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통치이념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흔히들 주체사상을 북한체제와 동일시할 정도로 북한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곤 했었는데, 이제 주체사상은 강성대국론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북한의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을 먼저 퇴조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언론과 공식문건에서 주체사상이 종적을 감추어가고 있다.

일반주민들도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개개인에게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자기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 방침이 주체사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명제가 배급제도가 마비되어 암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생필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주체사상이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사상적 근거로 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혁명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나서게 하는 이론적 근거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어떤 지배이데올로기든지 피지배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지지를 받는 한에서만 효율성이 있다.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도 생성의 초기단계부터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현재는 쇠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수구적이고 방어적인 주체사상을 보다 경제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성대국론이 대체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본격적인 김정

일의 시대로 바뀌자 이러한 변화가 왔다는 것은 김일성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주체사상도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통치이념도 세대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체사상없는 북한체제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주체사상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사상교양을 강화하고자 할 때 주체사상이 동원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주류 통치이념의 자리는 이미 강성대국론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역할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북한지도부의 의도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바, 수령유일지배 체제, 군사국가, 전체주의국가, 신정체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필자는 북한을 신정체제로 보는 데 동의한다. 북한 지도자는 신격화되었고, 주민들은 신격화된 지도자를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 김일성은 ‘신’이고 김정일은 ‘신의 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주체종교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사상은 ‘성서’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노래는 ‘찬송가’이다. 권력엘리트들은 ‘사제’이고, 주민들은 ‘신도’이다.

물론 북한의 ‘종교국가’적 체제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이 혼재된 상태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종교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신권을 유지했던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의 후계자 김정일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못지 않은 절대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의 절대성은 지난 정상회담과 그 이후 행해진 각종 정책에서 증명되었다. 김정일은 대남비방 중지, 6·25행사 중지 등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교시’들을 쏟아 놓았다. 이것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권적’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조치들이었다.

종교화된 정치의 폐단은 경제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은 오히려 ‘산속의 종교’인 주체종교를 ‘세속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폐쇄된 공간에서 조용히 공동체 사회를 꾸미려든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상은 경제난으로 인해 무너졌고 세계로 나와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천년왕국’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세속화를 추진하면서도 고유의 종교적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만일 비자발적인 ‘세속화’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세속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폐쇄된 공간인 북한에서만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세속인들의 ‘구세주’가 되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화된 체제’는 놀라운 통합력을 보유한다. 이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슬픔, 고통,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일탈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다. 자신들만이 정통이고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단이고,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은 통합을 위해 이단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통합을 이룬다.

그 동안 북한은 ‘주체종교국가’의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을 ‘사탄’으로 지목하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였다. 북한의 ‘사제들’은 미국의 위협만 사라지면 ‘천년왕국(강성대국)’이 도래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고, 신자들인 북한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소악마’ 정도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행복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통일을 열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종교국가처럼 공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융합체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후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천년왕국’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강국’ 건설

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득불 ‘세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부분개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도될 것이다. 그 범위도 경제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경제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자신들만의 공동체인 ‘동굴’속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도 매우 ‘항구적 평화’가 아닌 ‘불안한 공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발언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북한을 소멸시키려 할 가능성 높고, 이에 대해 북한 또한 미국을 ‘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먼 장래에 ‘주체 종교국가’인 북한과 ‘기독교 국가’인 미국간에 ‘종교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의 정치: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 론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시 보여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동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회담 시 김 위원장은 상황을 주도하면서 마치 한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하였다. 조명록, 김용순 등을 비롯한 그의 참모들은 김 위원장을 ‘절대자’처럼 대하였고, 주민들은 그를 ‘열광적’으로 추앙하였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만큼은 종교지도자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김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일성 주석은 생존시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끌어 올렸다. 김 주석의 ‘교시’는 교리화 되었고, 누구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율법이 되었다. 김 주석의 교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무조건성의 원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았다. 김 주석은 사후에도 ‘영생론’¹⁾에 입각하여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 그

1) ‘영생론’의 근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는 비록 죽었지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주민들의 ‘사회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現人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²⁾ 이러한 실태는 전형적인 ‘정치의 종교화(religionized politics)’이다.³⁾

이러한 김 주석의 절대적 지위는 김 위원장에게로 전수되었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과 동일시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있고, 김 위원장은 ‘21세기 수령’으로 추앙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⁴⁾하는 가운데서도 김 위원장 권력이 공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러한 신정체제적 성립을 위해 억압기제들을 동시에 작동했던 것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충성은 자발적인 측면이 대부분이지만 지속적인 체계적인 사상 및 조직 통제⁵⁾의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주의체제론, 군사국가론, 수령체제론, 유일체제론, 신정체제론 등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다”라는 구호임.

- 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단장이었던 김영성은 2000년 9월 24일 남측 백두산 관광단들에게 “수령없고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강제로 내몰았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눈물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던 아버지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북한주민들이 수령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울부짖었음을 강조했음. 『한겨레신문』, 2000.10.3; 북한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우정, “북한의 권력승계 이론과 실제,”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 2000), p. 218 참조.
- 3) 정치의 종교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Robert N. Bellah, *Tokugawa Religion* (Ill. Glencoe: The Free Press, 1957); 山本和, 이준식 역, 『政治와 宗教』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등임.
- 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286.
- 5) 2000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관광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황태연 교수도 “신적 존재로서의 수령중심으로 철저히 잘 조직돼 주민들의 삶 속에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증언하였음. 『한겨레신문』, 2000.10.4.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각기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신정체제론을 재해석하는 선에서 북한체제의 특성과 향후 변화를 구명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북한 체제(국가) 성격에 관한 제 논의

1. 전체주의체제론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 주장자는 프리드리히(Friedrich)와 브레진스키(Brezinski)이다. 그들은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갖는 특징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공식 이론체계로 구성된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완벽한 최종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상형태를 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독재자 1인이 영도하는 단일 대중정당을 가진다. 셋째, 당과 비밀경찰의 통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테러체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일체의 유효한 대중전달수단은 당과 정부의 수중에 장악된다. 다섯째, 독재자는 모든 전투에 사용되는 일체의 유효한 무기를 독점한다. 여섯째, 전체 경제를 중앙에서 통제·지휘하는 체제가 있다.⁶⁾

오늘날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맥코맥(G. McCormack), 양호민 및 이상우 교수⁷⁾ 등이다. 이상우 교수는 프리

6)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New York: Frederick A. Preager, 1965. p. 3.

7) 양호민과 이상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13~100 참조.

드리히 및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6가지 요소를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설명하였는 바, 그것들은 주체사상, 조선노동당, 당과 당지배하의 정부기관에 의한 숙청, 당과 정부의 대중매체 독점, 김일성 주석의 무력독점, 중앙통제경제 등이다.⁸⁾

맥코맥은 스탈린 사후 북한처럼 전체주의적 지배 모델이 딱 들어맞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 체제를 공식 교외의 철저한 주입을 통한 자발적 성장공간 박탈, 철저한 감시와 테러, 그리고 국가의식을 통한 대중동원 등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된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본다.⁹⁾ 이 때의 그가 말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은 전통적인 전체주의론과는 달리 기든스(A. Giddens)가 규정한 신전체주의 국가이다.¹⁰⁾

2. 전체주의적 술탄체제론

이의 입장에 선 대표적인 학자는 최완규 교수¹¹⁾이다. 그는 북한체제를 비교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분석한 후 북한체제를 스탈린식 전체주의

8) 이러한 주장은 북한체제를 설명해 주는 유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개념의 모호성, 냉전적 규범의 함축성, 유사현상간의 상이성 분석의 한계, 정태성으로 인한 변화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서울: 역사비평사, 2001), p. 27.

9) Gavan McCorma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 1993, p. 46.

10) 기든스,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서울: 삼지원, 1991), pp. 348~349.

11)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pp. 11~40.

모델과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식 술탄 모델의 조합으로 본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국가체제의 특징적 요소로 제기된 지도자국가 현상, 대중의 지지, 집단주의 현상 등은 기실 전체주의 국가체제 일반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모델이다. 아울러 북한체제는 베버(Weber)의 술탄체제(Sultanistic regimes)¹²⁾적 형태 즉, 세습주의적 성향을 갖는다. 세습국가는 통치자 개인 또는 그의 가족의 권위에서 연유하는 고도로 집중화된 권력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이 체제하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용되며 법과 제도보다는 개인 및 그 일족 중심의 지배가 보편화된다. 술탄적 정치체제는 술탄 개인의 영역이다. 또한 이 체제하에서는 매우 자의적인 상징조직을 통해 지도자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칭송이 보편화된다.

북한의 국가체제는 특정 시점이나 부문에서는 ‘북한적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스탈린식 전체주의나 술탄체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속에서 포함할 수 있는 특수성이지만 완벽한 체제구분을 할 수 있는 배타적 특성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보다 보편적 현상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체제와 술탄체제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 왕조적 전체주의론

대표적 주장자는 박형중 박사이다. 그는 스테판(Stepan)과 린쯔(Linz)의 주장을 원용하여 왕조적 전체주의의 특징으로 다원주의 부

12) 이에 대해서는 H. E. Chehabi and Juan J. Linz, “A Theory of Sultanism 1,” H. E. Chehabi and Juan J. Linz, ed.,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p. 3~25 참조.

재, 공산당을 대신한 극도의 자의적인 지도자에 의한 권력독점, 당과 국가의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황제’의 전제적 권력행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법치의 부재, 낮은 제도화 수준, 공과 사의 극도의 혼합 등을 들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왕조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친족 및 족벌 중심의 지도부 구성과 권력의 왕조적 승계로서 북한은 이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즉, 친족권력 계승, 가족을 핵심요직에 임명하려는 극단적 경향, 엘리트층원의 협소한 기반 등은 소련의 스탈린 전체주의와는 다른 북한식의 왕조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둘째, 왕조주의하에서는 원래의 전체주의적 지배의 지향점이 일반적 이데올로기 목표(공산주의 건설)로부터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변화하고 왕조주의적 경향의 등장과 함께 국가의 전체주의적 공식이데올로기는 지도자에 대한 극단적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용된다는 것이다.¹³⁾

4.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론

대표적 주장자는 커밍스(B. Cummings)이다. 커밍스가 제시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모델은 지배의 억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모델과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 지지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조합주의는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이념으로서 조합주의는 공동체주의적 사고인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다. 그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전례에서 보면 북한은 독특한 사회주의를 개

13)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43~51.

척해왔다고 전제하면서 북한 국가체제의 조합주의적 특성을 제시한다. 즉 지도자(북한 가족의 우두머리), 당(통치자와 피치자간 연결혈맥, 어머니 당), 사상(주체사상), 가족(사회의 핵심단위), 혁명(지도자의 전기), 안내자(가족 세습), 집단(사회조직), 세계(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중심주의)가 상호 연결된 유기체가 북한의 국가체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결국 커밍스는 북한의 국가 체제와 권력 조직을 혈연적 조합주의의 성격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핵심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가족, 조선노동당과 빨치산파, 관료, 지식인과 전문인, 사무원, 프롤레타리아트, 농민이 하향식 위계질서로 형성되어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 성격이 강한 사회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에 기초한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이 함께 하는 조합주의적 방식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⁴⁾

5. 정규군국가론

대표적인 주장자는 와다 히루키이다. 와다는 ‘정규군국가론’을 주장하기 이전 ‘유격대국가론’을 내놓은 바 있다. ‘유격대국가론’은 김일성이 유일한 최고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화한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이 주장은 영도예술과 가족국가론, 전통적 국가론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가족국가론에서는 수령=아버지, 당=어머니, 인민대중=

14)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 연구 I」(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pp. 342~343.

자식이라는 등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후 이것은 일심단결, 대가정, 충효의 결합을 강조하고, ‘김일성=할아버지,’ ‘김정일=아버지’라는 확대된 가정의 이미지를 지닌 전통적 국가론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와다는 1998년부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정착시킨 체제를 ‘정규군국가’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논거는 김일성 사후 빨치산들이 연이어 사망함에 따라 혁명 2세대들이 그 자리를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최고 군엘리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격대는 아니고, 정규군이라는 것이다. 즉 와다는 이제 북한에서는 정규군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회는 여전히 군사조직화되어 있는 바, ‘선군정치’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기풍이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998년 9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규군국가는 법제화된 것으로 분석한다.¹⁵⁾

6. 군사국가론

대표적인 주장자들은 서대숙 교수, 류길재 박사, 이대근 박사, 김용현 박사¹⁶⁾ 등이다. ‘정규군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장은, 서대숙 교수에 의하면, 군국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역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나 그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 정치체제라는 것이 핵심이다.¹⁷⁾

15)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서울: 돌베개, 2002), pp. 306~322.

16)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1950~60년대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년 12월)

17)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223.

류길재는 일반적으로 북한을 군사국가로 규정하는 지표들인 당 및 국가기관에서의 군의 비중 및 서열 상승, 대규모 승진인사, 빈번한 군부대 방문 및 현지도 등 김정일의 군에 대한 우대정책,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등을 부정하고 “국가운영을 위한 규범과 의식, 절차, 관행 등 제도적 틀이 군사문화 또는 병영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군사국가와 ‘군부정권’ 및 ‘군부통치’를 구분하고 있다.¹⁸⁾

반면 이대근은 북한 군사국가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¹⁹⁾의 논거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이러한 논거를 통해 북한을 ‘군사국가’로 보는 것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⁰⁾ 그가 제시한 ‘군사국가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군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군부 중심 현지도, 경제건설 등 군부 역할의 확장, 군중심 체제 이데올로기 강화, 주석단 내 군부 지도자의 부상,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 등, 둘째, 반면 노동당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 등 당의 주요 정책결정기구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의 리더쉽은 붕괴되었다, 셋째,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노동당의 약화로 노동당보다 군부가 우위에 서게 됐다.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노동당에서 군부로 대체되었다. 넷째, 이 결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당-국가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국가형태는 군부통치국가나 군사국가로 바뀌었다 등이다.

양현수도 북한의 ‘군사국가화’ 문제와 관련, 학자들이 ‘선군정치,’ ‘전

18)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p. 118.

19) 이대근이 예로 들고 있는 학자들은 김연철·서동만·김성철 등임.

2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년 12월), pp. 9~13.

시형 국가병영관리,²¹⁾ ‘전시체제적 사회주의의 강화,’ ‘유사전시체제화,’ ‘군부통치국가’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사국가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연구자들이 북한을 ‘군사국가’로 보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국가기구 및 당기구에서 북한군의 비중과 서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둘째, 김정일의 북한군에 대한 우대정책, 즉 대규모 승진인사, 빈번한 군부대 방문 및 격려발언 현상, 셋째, 1998년 개정헌법에서의 변화, 즉 국방위원회의 확대 개편 현상 등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군사국가’로 보는 연구자들이 정치군관과 정규군관을 구분하지 않는 등 군부의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군부위상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선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으며, 군부의 정책성향을 선입관적으로 강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²²⁾

7. 수령(유일)체제론

대표적인 주장자는 스즈키 마사유키와 이종석·최성·김광용 박사 등이다. 스즈키는 수령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지닌 동시에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추대한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수령이란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에서 최고 수뇌이고 심장이며 당과 계급,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한 중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령이 인

21) 레닌(Lenin)은 1918.7-1921.3까지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채택,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내부자원의 총동원 특히,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최대한 공출하였으나 농민들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이후 신경체경제정책(NEP)을 채택하였다.

2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한국정치학회 추계발표회의 발표 논문, 1999년 9월 18일), pp. 1, 12~13.

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당을 조직하고, 당은 수령의 영도를 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인 것이다. 따라서 수령 이외에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키는 이러한 수령제를 직접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주체사상 중에서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수령제를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령 승계론을 내세워 김정일의 유일적 지배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일치시켰다. 또한 수령과 대중을 혈연적으로 연결시켜 수령은 혈연집단의 아버지이고 당을 어머니로 하는 일종의 가족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엄격한 계층질서, 즉 수령을 중심으로 그 친족, 주위에 항일투사 및 한국전쟁 영웅과 혁명 유가족, 당·정·군 간부, 그리고 인민이라는 동심원 모양의 계층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스키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은 항일 빨치산 집단이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수령제가 부분적으로는 유격대국가체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²³⁾

이종석은 스키의 주장을 수정하여 유일체제를 주장하였다. 그는 스키의 모델이 북한체제 작동의 제도적 메커니즘이나 사회문화적 조건 등을 규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을 유일체제로 개념화하였다. 이종석은 유일체제의 특징적 현상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 둘째,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체제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는 체계, 셋째,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양식들을 재생산하는 광범한 사회적 체계, 즉 유일사

23) 스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中央日報社, 1994), pp.82~93.

상체제를 갖고 있는 체제, 넷째,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숭배 현상을 동반하는 체제이다. 그는 유일체제는 지배의 강제적 기제뿐만 아니라 자발적 동의기제를 구비한 체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석도 스키와 마찬가지로 이 체제의 이론적 기초로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들고 있다.²⁴⁾

8. 신정체제론

대표적인 주장자는 이상우 교수와 김병로 박사이다. 이상우 교수가 북한체제를 신정체제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체제는 근대적 전체주의 전체체제보다는 지배자의 神性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찾는 동양적 전제군주체에 가깝다. 통치권위를 조직이나 직이 아닌 자연인의 신성에서 찾게 되면 그 정치체제는 이미 ‘신정체제’로 된다. 보통사람은 그 누구도 그 신성을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지배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신성의 권위를 빌어 신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임한 사람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김정일도 권력을 승계 받았으나 오직 김일성의 권위로만 통치하고 있다. 새로운 당수나 당간부는 오직 김일성교의 사제직을 수행할 뿐이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였고, 김일성주의 경전을 갖추었고 노동당이라는 사제단을 가진 완전한 종교단체로 되었다. 북한은 단순한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제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국가로 되었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종교국가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

2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210~211.

면 오늘날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⁵⁾

김병로는 한층 정교하고 세련된 주장을 통해 북한을 기독교와 유사한 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의 교리와 상징체계, 각종 집회와 모임, 행위규범과 윤리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기독교 신앙의 숭배 대상인 하나님 혹은 예수와 북한의 공산주의 혹은 김일성·김정일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지만 종교의 형식을 구성하는 초월적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신앙의 대상을 절대화하기 위한 십계명과 ‘10대원칙’에 나타난 유일성과 배타성은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인간을 자연과 구별된 존재로 파악하고 세계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간론, 신앙의 대상과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고리로서 예수와 수령 존재의 필연성,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과 영생의 개념, 교회공동체와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탄이나 제국주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낙원 혹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은 교리와 신념체계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높은 종교적 친화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북한은 사회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독립건물 혹은 부속건물로 건설하여 그 곳에서 종교의식과 종교학습, 종교생활을 거행한다. 북한이 일반교양학습이나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문화회관과는 별도로 매우 성스럽고 엄숙한 곳으로 간주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을 조성하고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거행한다는 점은

25) 이상우, “서론: 김일성체제의 특징,”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25~26.

주체사상이 종교양식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소년단, 청년동맹, 직맹, 농근맹, 여맹, 당원으로 구분하여 일주일 주기로 진행되는 생활총화를 비롯하여 학습생활, 수요강연회, 인민반회의, 아침독보회 집회와 모임은 북한사회의 종교성을 유지시켜주는 종교 의식이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성문화한 성경인 ‘로작’과 김일성·김정일을 칭송하는 찬양가가 갖추어져 있고 언어의 내용이나 언어사용의 패턴, 일상생활 혹은 학문활동에서의 교시·말씀 인용, 종교에의 입문절차 등 행위규범에서도 주체사상은 기독교와 유사한 성향을 띠고 있다”²⁶⁾

26)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99~200.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북한체제 성격에 관한 제 논의

| 주 장 | 주 장 자 | 주 장 내 용 |
|------------------|--------------------------|--|
| 전체주의 국가 | 맥코맥, 양호민, 이상우 | 정교한 이데올로기(주체사상), 단일대중 정당(조선노동당), 비밀경찰에 의한 테 러(숙청), 대중매체독점, 무력독점(수령 의 군대), 통제경제, |
| 전체주의적 술탄체제론 | 최완규 | 스탈린식 전체주의+루마니아식 술탄체 제(권력의 가족 독점과 세습) |
| 왕조적 전체주의론 | 박형중 | 다원주의 부재, 자의적 지도자에 의한 권력독점, 법치의 부재, 낮은 제도화 수 준 |
|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론 | 커밍스 |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지지, 지도 자-당-사상-가족-집단-세계 등이 유기 적 결합 |
| 정규군국가 체제론 | 와다 하루키 | 김정일=최고사령관, 주민=정규군 |
| 군사국가체제론 | 서대숙, 류길재 | 군인의 정치개입제도화, 규범과 의식의 군사 문화화, 당군일체 |
| 수령(유일) 체제론 | 스즈키 마사유키, 이종석, 최 성 | 혁명적 수령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광 범한 개인숭배 현상, 자발적 동의 |
| 신정체제론 | 이상우, 전현준, 김병로 | 최고지도자의 ‘신격화’, 믿음체계로서의 주체사상, 종교의식으로서의 김일성 혁 명역사연구실, 조직체계로서의 공산당 |

Ⅲ. 북한체제의 ‘종교화(성화)’

1. 북한체제의 종교화 배경

여기에서 ‘종교화(성화)’란 정치의 종교화, 최고권력자의 ‘신격화’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정치가 종교화된 배경과 관련, 김일성 주석을 배제하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김일성이 ‘신격화’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김일성은 해방이후 권력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권력에 대한 도전 방지를 위해 자신에 대한 ‘신격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수령론은 ‘김일성 신격화’의 최종심급이 되었고, 이는 ‘정통(orthodox)’과 ‘이단(heterodox)’을 구분짓는 척도가 되었다.²⁷⁾

둘째, 해방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은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고 남녀는 동등한 입장이 되었지만 정치적 혼란은 지속되었고,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더구나 6·25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미제’에 대한 공포심은 증대되어만 갔다. 불안한 북한주민들은 가난과 ‘外侵’으로부터 보호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김일성은 6·25전쟁기간동안 자신이 ‘구원자’임을 자임하였고 ‘수령’을 칭하였다.²⁹⁾

27) 수령론 등장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 글에서는 정치권력의 강화라는 측면에 국한하여 수령론을 다루기로 함.

28)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유사한 기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학자도 인정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와 주체사상」(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을 참조.

29) 최성, 「북한정치사」(서울: 풀빛, 1997), p. 33.

정치가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욕망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이다. 현재의 욕망을 미래로 넘기게 하는 데는 종교의 역할이 크다.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고난은 참고 견디어 내야 한다는 교리를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이다. 김일성은 인간이 갖는 종교적 측면을 교묘히 활용,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다만 김일성이 제시한 미래는 ‘이밥, 고깃국, 비단옷, 기와집’ 정도였다.³⁰⁾

김일성 ‘성화’ 결과는 첫째, 믿음체계로서의 주체사상의 완성이다.³¹⁾ 주체사상은 우리의 전통종교의 특징³²⁾이 그렇듯이 人尊思想을 내세우고 있다.³³⁾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명제는 김일성이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³⁴⁾ 북한주민들은 이것을 김일성이 창안한 것으로 알았다. 주체사상은 1967년부터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되면서 ‘혁명적 수령관’으로 변했다. 수령의 절대성과 수령에 대한 무조건 복종이 미덕이 되었다. 이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전변되었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은 ‘신’이 되었다. ‘혁명적수령관’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축약되었고, 북한주민들은 계층,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30) 김일성, “모든 힘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하여(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함경남도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3년 10월 20일),”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15~116

31) 주체사상의 국가장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영수, “국가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완규 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pp. 79~104 참조.

32)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경세원, 1996), p. 41.

33) 북한이 전통사상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서울: 을유문화사, 1997), pp. 171~320를 참조.

34) 인간중심 사고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서구에서는 그리이스 시대부터 전래되어온 것임.

누구나 ‘주야로 묵시’해야 할 성서가 되었다.

둘째, 김일성을 숭모하기 위한 의식이 제도화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일일생활총화, 주간생활총화, 아침독보회, 수요강연회 등을 통해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반성을 한다.³⁵⁾ 총화는 누구나 예외없이 참여해야 하고, 이슬람교도들이 세계 어디에서나 메카를 향해 절을 해야 하듯이 북한주민들도 어느 곳에서나 총화에 참석해야 한다.³⁶⁾

셋째, 종교성 유지를 위한 사회관계가 매우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하게 되어 있다. 종교성은 사회관계를 통해 더욱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이 매우 중시된다. 당원은 당위원회에, 농민은 「농근맹」에, 여자는 「여맹」에, 청년은 「사회주의청년동맹」에, 소년과 소녀는 「소년단」에서 신앙심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조직을 떠나면 그것은 배교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배교자에 대한 처벌은 단호하다. 정치체제의 유지는 주민 대다수의 정당성 인정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 체제유지를 위해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초월적 권위와 연관시키는 한편 질서 파괴자를 혼돈과 악마의 세력과 결탁한 자로 몰아세워 공개적으로 처벌한다.

2. ‘신’으로서의 수령

김일성의 ‘신격화’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1950년대 초 수령으로

35)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p. 7.

36) 김정일은 “출장을 구실로 학습총화에 빠진 사람들은 현지에 따라가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8일), 「김정일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478.

블리우기 시작한 김일성은 1953년 스탈린 사후 대두된 개인숭배 반대 열풍에 직면하게 된다. 그 정점은 1956년 8월 전원회의였다. 비록 정적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기는 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김일성은 1955년 12월 내놓았던 ‘주체’를 더욱 정교화하기 시작했다. ‘주체’에 반하는 노선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반주체’로 규정지어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악’으로 낙인찍힌 ‘반주체’는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영원히 ‘사회정치적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핵심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사회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었다. 수령주의에 비협조하는 ‘수정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³⁷⁾ 스탈린이나 모택동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었으나 이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혈통을 강조하는 등 말 그대로 봉건적 잔재를 내포하는 정도가 되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심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에 대해 숙청이라는 카드로 맞섰다.³⁸⁾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김일성은 1972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석이 되었다. 세속정권의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이 세속정권의 왕으로 책봉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후까지 대비, 왕권을 세습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내밀히 ‘후대왕’으로 간택되었다. 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일사분란한 왕정체계 수립에 나섰다. 수령을 ‘신격화’하기 위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제정하

37) 일명 ‘5·25교시’을 통한 이같은 반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은 전 사회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전변시키는 데 상승작용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등나무집, 2000), pp. 312~31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pp. 148~151 참조.

38) 여기까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최 성, 「북한정치사」, pp. 93~189 참조.

는 한편,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하였다. 물론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 제고를 위해 ‘유일지도체계’ 확립도 병행하였다.

1980년대는 김일성은 명실상부하게 ‘신’이 된 시대였다. 1982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주체사상을 집대성하고 1986년에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내놓았다. 김일성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통찰력을 지니고 정력적인 사색과 불면불휴의 탐구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시킨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³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두 개로 보았다는 점이다. 사실 인간세계에는 부모보다 종교교주를 더 신봉하며, 가족보다는 종교가족들을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령은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고 핵이며, 뇌수이다. 수령의 절대화·신격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일사불란하게 단결하고 수령의 영도에 따라 행동한다. 수령은 이론적인 면, 사상적인 면, 실천적인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가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 사회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부여해 준 것이 수령이라는 것이다.⁴⁰⁾ 결국 수령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귀중하다

39)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서울: 지평, 1989), p. 16.

4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59~164.

는 논리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곧 ‘신’이다.⁴¹⁾ 비록 그는 사망했지만 알파요 오메가이며,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물, 불이다. 김일성을 제외하고 북한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기독교를 논하는 것과 유사하다. 북한이라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경배한다. 김일성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의 절대자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3. ‘신의 후계자’로서의 ‘수령 후계자’⁴²⁾

종교집단은 대체로 靈力의 계속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체제를 유지할 수계자들을 기르게 마련이다. 종교의 생명력은 얼마나 많은 수계자를 길러 국내외 각지에 파송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종교화된 정치체제에서는 후계체제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확고한 체제구축에 심혈을 기울인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사후 격하운동이나, 중국의 모택동에 대한 임포의 배신 등에서 교훈을 얻어, 본인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치 않을 수 없었고, 자기 영력의 전수자로서 가장 확실한 육체적 분신인 아들 김정일을 간택했다.

41) Dae Sook Suh,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임 은, 『김일성정전』 (서울: 옥촌문화사, 1989)

42) 졸저,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이찬행,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2001);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사, 1996); 박규식, 『김정일 평전』 (서울: 양문각, 1992); 진성계, 『김정일』 (서울: 동화연구소, 1990)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수령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고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⁴³⁾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령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수령이 못되어서도 안된다는 논리로 후계체제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김정일은 뛰어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고, 김일성의 품성과 사상과 덕목을 가장 많이 전수받았으며, 김일성을 가까이 모시면서 수령의 역할을 배우고 체득했기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고도로 종교화된 정치체제에서는 ‘신내림’을 매우 극비리에 추진하는 것이 상례이다.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타는 것이며,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되어 큰 재앙이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그것은 수많은 반발세력들이 일어나 카리스마에 도전해 오는 재앙을 말한다. 이러한 비밀공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김일성이 직접 신내림을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 즉, 원로 정치국원들을 동원했다. 솔직히 아무리 민주화된 종교집단이라도 교주가 의도하지 않는 정책결정을 건의할 사제는 없다. 그것은 신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신에 대한 모독이며, 천벌을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로들’을 동원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후계구도는 사실상 김일성의 ‘神託’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장로’ 김영주 등 몇 사람을 동원, 김정일의 간택을 주장케 했으나, 김일성은 일부러 몇 번 거절했고, 이에 장로들은 순서에 따라 신자(인민)들을 대거 동원하여 김정일 추대를 간청하게 했으며, 결국 김일성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했다. 이것이 곧 정치의 종교적 측면이

43) 조선로동당출판사, 『인민의지도자 1』 제2판 (동경: 시대사, 1983), pp. 1~7.

다. 이후로 김일성은 동원된 밑으로부터의 요구 수용이라는 권모술수를 시의적절하게 잘 이용했다. 이것은 ‘혁명적군중로선’의 변용이었다. 그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속성을 너무나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천재였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수법이 여타의 사이비 종교와 달리 국가 전체를 하나의 ‘두리’에 뭉쳐 놓을 수 있는, 김일성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정일은 ‘현세의 신’⁴⁴⁾이 되었다.

IV. ‘종교화된 체제’인 북한의 변화(‘세속화’) 전망

1. ‘세속화’의 주체

종교는 대체로 ‘성화’가 완성되면 자의건 타의건 ‘세속화’의 길을 택하게 된다. 다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정립되지 못하도록 탄압받을 때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만일 ‘세속화’에 성공하면 ‘민족종교’는 ‘세계종교’가 된다. 김일성은 생존시 ‘주체종교’의 ‘세계종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김일성 사망후 ‘세속화’는 ‘제2의 교주’이자 수령 후계자인 김정일이 ‘유훈관철’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神權’에 가까운 절대권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로서 수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보유하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당·정·군 관료와 인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44) 간접화법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월북자로서 「조평통」 부위원장인 오익제를 통해 김정일을 ‘현세의 한울님’으로 칭송하고 있음. 「조선중앙방송」, 2002.1.2.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는 김정일 정책의 충실한 ‘전도사’일 뿐 현재까지는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은 김정일이 직접 ‘비준’한 인물들로서 그에게 절대충성하고 있다. 다만 당·정·군 엘리트들은 인민들의 여론을 수렴, 김정일에게 정보와 정책을 건의하는 보조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개방으로 인해 체제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김정일에게 개방속도 조절을 건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군 관료들은 체제수호 측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자들로서 김정일의 개방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이다.

북한인민들은 변화의 객체일 뿐 자신들의 의사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김일성 개인에 대한 신격화는 주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으로 보인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만이 미덕이 되었고 유사시에는 수령(후계자)을 위해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조처럼 ‘총폭탄’이 되겠다는 믿음만을 과시하고 있다.⁴⁵⁾ 수령(후계자)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천년왕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북한주민들은 열심히 봉사하며 묵묵히 살아 왔다. 그러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밤낮으로 묵시하며 산 결과는 가난이었다.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개인들은 스스로 식량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수령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만일 불평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유일신인 김일성의 사망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행군’을 성실히 수행해 냈다. 북한주민들은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이 ‘악마’인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만 해제되면 모든 것이

45)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31일 군에 입대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총폭탄영웅, 자폭용사가 돼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하였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일종의 예배의식인 총화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고 각종 종교조직인 소년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직맹, 여맹, 농근맹, 교도대 등에 편입되어 주체사상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배교자(탈북자)도 발생하지만 그것이 곧 ‘종교화 된 체제’를 붕괴시킬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2. 변화로서의 ‘세속화’ 실태

북한은 이미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세속화’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세속화는 내·외부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진행되지만 여기에서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강요된 세속화에 주목한다.⁴⁶⁾ 그러나 첫째, 1971년 4월 미국 탁구팀의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소위 미·중간 ‘핑퐁외교’가 시작되고 10월 키신저 당시 美 국무장관의 북경방문 및 1972년 2월 닉슨 美 대통령의 북경방문, 동년 9월 일·중수교 등으로 세계적인 데탕트 무드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수용하고 1972년 7월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는 OECD국가들로부터 외채를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하였다.⁴⁷⁾ 북한은 1974년 3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⁴⁸⁾하였고, 9월에는 UN상주 업저버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둘째, 중국에서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통해

46) 1960년대 후반 이후 세속화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47)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p. 192.

48) 원문은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하)』 (서울: 온누리, 1989), pp. 455~464 참조.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되고,⁴⁹⁾ 1979년 1월 미·중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북방3각관계’가 크게 흔들리게 되자 북한은 한반도평화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시 극명하게 나타났는 바, 북한은 대외정책 기조로 자주·친선·평화를 내세우고 ‘대남혁명전략’ 대신 사실상 남북한 현상유지 정책인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대미 ‘인민외교’의 일환으로 1981년 7월 김종익을 비롯한 7명의 재미 교포학자들을 초청하였다. 이후 1984년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투자를 겨냥한 「합영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북한은 1979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3자회담’을 동년 10월에 거부한 것과는 달리 1984년 1월에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를 통해 미국에 ‘3자회담’을 제기하였다. 1983년의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1984년 3월 ‘LA 올림픽 공동출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고, 10월에는 남한에 수해구호물자를 전달하였으며, 1985년에는 ‘남북불가침 선언 채택’을 주장하였다. 1985년 9월에는 분단후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이 성사되었다.

셋째,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으로부터 촉발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0년 사실상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즉,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에게 시장상실은 물론 체제붕괴 위협까지 느끼게 하였다.⁵⁰⁾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은 1989년 남북대화를 적극화하였다. 북한은 1989년 1월 남한의 고위당국자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고 1989

49) 김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90), p. 295.

50) 동구권 붕괴의 북한에 대한 영향은 하용출, “동유럽·북한관계,”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p. 93~94 참조.

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 1990년 9월 4일부터 1992년 9월 18일까지 8차례의 본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⁵¹⁾ 아울러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연방제안을 변형시켜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를 토대로 남북한 자치정부에 국방권과 외교권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⁵²⁾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선량한 이미지’ 착근정책은 19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수많은 개방관련 법령들을 만들어 냈다.⁵³⁾ 이는 북한의 개방의도를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게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한편 1990년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한 핵문제⁵⁴⁾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명분을 제공하였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모면하기 위해 북한은 대미외교에 매진하였다. 1992년 1월 22일 당시 김용순 당국제부장은 미국 뉴욕에서 아놀드 켄터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였다.

넷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아사자 속출 등 대내적 악재를 맞아 위기 타개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북한은 끈질긴 대미 ‘편승외교 (bandwagoning)’를 펼쳤고,⁵⁵⁾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1995년에는

51) 자세한 전개과정은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287~310 참조.

52) 『로동신문』, 1991.1.1. ‘김일성 신년사’

53) 개방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집』 (1996) 참조.

54) 북한핵문제가 서방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 2월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90.2.26.

55)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종합분석은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성남, 경기도: 세종연구소, 1995) 참조.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1997년부터는 자본주의 교육을 위해 관료들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1998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고,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⁵⁶⁾ 1999년부터 북한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에 매진한 결과 2002년 3월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중 1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울러 김정일은 2000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7월에는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서는 변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발표하였다. 2001년 1월 4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은 “새로운 연대에 들어선 것만큼 우리는 지난 날 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모든 사업을 우리 식대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⁵⁷⁾ 또한 “구시대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자”고 촉구하였으며, “사상 관점과 사고 방식도 일본새와 생활 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⁵⁸⁾ 김 위원장은 ‘새로운 관점’에 입각, IT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지역인 상하이 푸둥지역을 방문, 개방에 대한 관심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56)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저,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참조.

57)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적 세기이다>, 『로동신문』, 2001.1.4.

58)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로동신문』, 2001.1.7.

3. '세속화' 전망

현재 북한은 또 다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까지 규정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위기는 경제난의 지속이다. 북한이 아무리 종교화된 체제이고 이념과 정치를 우선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교주'가 '신도들'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종교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길은 3가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철저한 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단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옥쇄'를 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순교'를 각오하고 '세속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위의 2가지를 적절히 배합하는 길이다. 소위 '선택적 개방'이 그것이다. '모기장'을 치고 '세속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세 번째 양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겠지만 북한은 '선택적 세속화'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는 지속될 것이다. 핵심신자들이 '교주'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교주' 보호를 위해 일반주민들의 동원에 더욱 정진할 것이고 주체종교의 사수를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싸울 것이다. 따라서 먼 장래에 이러한 移敎徒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종교 국가인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⁵⁹⁾ 물론 북한이 '주체종교'를 포기하면 이러한 충돌을 피할 수

59) 헌팅턴은 향후 종교간 충돌을 예언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새뮤얼 헌팅턴, 소순창·김찬동 옮김,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서울: 김영사, 2001) 참조.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이다.

다음으로 ‘주체종교’의 ‘세속화’를 위한 행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포교활동’과 함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체종교’를 선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났는 바, 그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요청이다.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의 1월 29일 ‘악의 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박길연-프리처드간 뉴욕회담, 북-일간 적십자회담 등을 개최한 것에서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태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러한 장을 마련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들 국가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개방을 통해 인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화된다면 개방은 더욱 확대되겠지만 ‘주체종교’에 훼손이 가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의 개방정책은 축소·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V. 결 론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바, 수령유일지배 체제, 군사국가, 전체주의국가, 신정체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필자는 북한을 신정체제로 보는 데 동의한다. 북한 지도자는 신격화되었고, 주민들은 신격화된 지도자를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 김일성은 ‘신’이고 김정일은 ‘신의 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주체종교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사상은 ‘성서’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한 노래는 ‘찬송가’이다. 권력엘리트들은 ‘사제’이고, 주민들은 ‘신도’이다.

물론 북한의 ‘종교국가’적 체제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대가정’론, ‘육친적 배려,’ ‘아버이,’ 충성과 효성, 의리 등 ‘유교적’ 특징, ‘단군시조론,’ ‘김일성 민족,’ ‘수령복’ 등 ‘민족종교’적 측면, ‘총폭탄 정신,’ ‘21세기의 태양’ 등 일본 천황제에서 나온 군국주의적 요소 등이 혼재된 상태가 북한체제의 특징이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종교적 요소들이라는 점이다.

신권을 유지했던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의 후계자 김정일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못지 않은 절대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의 절대성은 지난 정상회담과 그 이후 행해진 각종 정책에서 증명되었다. 김정일은 대남비방 중지, 6·25행사 중지 등 기존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교시’들을 쏟아 놓았다. 이것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권적’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조치들이었다.

종교화된 정치의 폐단은 경제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은 오히려 ‘산속의 종교’인 주체종교를 ‘세속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폐쇄된 공간에서 조용히 공동체 사회를 꾸미려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상은 경제난으로 인해 무너졌고 세계로 나와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만의 ‘천년왕국’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세속화를 추진하면서도 고유의 종교적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

만일 비자발적인 ‘세속화’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세속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폐쇄된 공간인 북한에서만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세속인들의 ‘구세주’가 되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화된 체제’는 놀라운 통합력을 보유한다. 이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슬픔, 고통,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고 일탈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다. 자신들만이 정통

이고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단이고,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은 통합을 위해 이단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통합을 이룬다.

그 동안 북한은 ‘주체종교국가’의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을 ‘사탄’으로 지목하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였다. 북한의 ‘사제들’은 미국의 위협만 사라지면 ‘천년왕국(강성대국)’이 도래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고, 신자들인 북한주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소악마’ 정도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행복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통일을 열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종교국가처럼 공고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융합체의 중심에는 김정일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후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천년왕국’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강국’ 건설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득불 ‘세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부분개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도될 것이다. 그 범위도 경제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경제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자신들만의 공동체인 ‘동굴’속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도 매우 ‘항구적 평화’가 아닌 ‘불안한 공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발언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북한을 소멸시키려 할 가능성 높고, 이에 대해 북한 또한 미국을 ‘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먼 장래에

‘주체 종교국가’인 북한과 ‘기독교 국가’인 미국간에 ‘종교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오 승 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 요약 >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토대 정비와 경제적 잠재력 발양, 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재건과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에 북한은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전개에 걸맞은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강성대국론의 구체적 요소로서 총체적 ‘국가경제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1.1.15~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작년 9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시에는 ‘3개 대표론’을 지지하는 등 이념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지도부는 체제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 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이후 김정일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회생만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북한식 경제모델을 강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그 변화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정책노선 변화가 수반할 정치적 부담이 유훈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책변화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직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표면상의 ‘강경’과 이면의 ‘유연’이라는 괴리 속에서 점차 상황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는 유훈통치 기간

을 종료하고 김정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8년 이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헌법개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는 ① 중앙의 성(省)과 관리국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의 집중관리, ② 중앙경제에서 분리된 지방경제의 자체관리(독립채산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③ 시장경제권과의 무역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외무역 촉진 정책, ④ 전산화와 정보기술 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관리의 현대화, ⑤ 토지정리사업과 군(郡)협동농장경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농촌경제의 통합적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의 변화는 그 동안 유지되었던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의 비효율성 완화, 지방 경제단위의 자율성 고양,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 농업원자재 공급 증대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와 이에 따른 지방경제의 자율권 확대는 북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 조치(지방예산권의 확대, 중앙의 간여 축소)를 통해 지방경제의 자체적 관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방경제와 시장기구를 접목하기 위한 과도기적 분권화 조치임과 동시에 지방경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공업 계획권과 생산물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통해 지방예산 자율권을 보장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암시장을 공식적 시장유통 기구로 전환하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가 지방경제의 소(小)계획경제화로 고착되고 만다면 북한경제의 궁극적 회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정권의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동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주로 관리방식의 ‘조정’과 대외무역을 활용한 ‘실리획득’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기구의 도입과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연계를 통한 비교우위개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개혁·개방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북한은 경제관리 방식의 조정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 환경적 요인의 호전에 따라 최근 2~3년간 경제상황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아직 산업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식량사정 역시 여전히 어렵다. 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제한된 정책조정만으로 ‘저점균형’의 경제상황을 탈피하여 정상적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오 승 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

I. 머리말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토대 정비와 경제적 잠재력 발양, 그리고 인민경제의 기술재건과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북한은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전개에 걸맞은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강성대국의 구체적 요소로서 총체적 ‘국가경제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1.1.15~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작년 9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시에는 ‘3개 대표론’을 지지하는 등 이념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¹⁾

북한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는 북한 스스로의 경제 운용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1990년대에 북

1) 중국공산당은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산당 내에 자본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해 왔으며,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현상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변화'에 비중을 두는 견해와 '지속'적 특성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이 혼재해 왔다. 그러나 변화와 지속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준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판단은 시사적이며 주관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더욱이 우리는 1980~90년대의 사회주의권 대변혁을 경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체제전환이나 아니냐를 북한 변화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나머지, 북한의 경제정책 및 관리방식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김정일시대를 열어가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이전시기와 어떻게 구분되며, 그 경제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경제에 대한 양(量)적 평가가 지니는 '확실'의 착시현상 속에 지나치게 종량적(從量的) 접근방식에 의한 북한경제의 분석에 탐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주로 최근에 발표된 북한의 경제관련 문건을 근거로 김정일시대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II. 북한경제 현황 및 정책 방향

1. 북한경제 개황

1990년대에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던 북한의 경제사정은 최근 다소 나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금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가동률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유엔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2001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38% 증가한 354만 톤으로 추정된다. 대외무역 규모도 최근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2001년도에는 일본의 쌀무상지원분까지 포함할 경우 2000년의 19억7천만 달러보다 50%이상 늘어난 30억달러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상업베이스의 무역량은 20.5억달러)²⁾ 무역량 증가는 주로 곡물과 에너지, 비료와 차량 및 전기기기와 기계류 등의 수입 확대에 더해 철강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이 어느 정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소 나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올해 추수기까지 여전히 140만 톤 이상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미국의 반테러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역별 또는 계층별 식량 배급량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반적인 식량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생산 및 수출입 증가 역시 대부분 1차산업과 중공업부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재 및 일상 생활용품 부족현상은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경제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제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전향적인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나 개방의 움직임은 없었다. 단지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외 경제교류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통일부,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1. 12.

북한은 최근 경제 전문인력의 해외 시장경제 체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도 호주와 이탈리아 중국 등지로 인력을 파견하여 금융, 농업,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추진했다. 북한은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관광사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베를린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호텔에 카지노를 개설하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평양 유경호텔 건설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금융기관간의 무역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에 가입하고 작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대외 무역 확대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북한은 대외경제 영역에서의 현실적 접근과는 달리 대내경제 정책에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라남의 봉화’를 경제부흥의 새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각종 궤기모임과 간부들의 견학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는 지난 8월 김정일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한 곳으로 자체적으로 선진기술이 적용된 대형 공작기계인 650톤급 크랭크 프레스 등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적 노력의 본보기로 선택되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대형 수력발전소인 예성강발전소 건설과 대규모 토지정리사업 및 각급 공장기업소의 기존설비 재가동에 주력해 왔다.

2.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경제개혁·개방노선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에 대해

서는 부정적 시각을 표명해 왔다. 또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적 정치권력이 가지는 정책변화상의 제약요인과 정책변화 경험의 한계 등은 북한의 변화가 아직은 ‘체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땅위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부족한것도 많고 난관도 많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 나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 바람에 끌려 들어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개혁》, 《개방》은 망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추호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입니다.³⁾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북한문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과도기적 불완전성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을 주로 사회주의권 대변혁과 기후조건 등 외생(外生)변수로 설명하던 과거와는 구분되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는 력사가 짧고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에게 경제관리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아직 미숙한것도 많고 완성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 경제관리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를 발전시

3)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458.

킬 수 없다.⁴⁾(굵은 글자체 부분은 필자 표시)

1998년 9월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유혼통치’기간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은 얼핏 서로 상충되는 경제운용 방식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1998년의 새헌법에 비교적 전향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반면, 나진·선봉지역의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1999년 4월에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강경회귀’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주요 연합기업소를 해체하여 다시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두는가 하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통제할 수도 있는 ‘비공식 부문 경제’의 확산을 계속 묵인해 왔다. 또한 공식문헌에서는 대외경제부문의 역할을 폄하하면서도 주요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높아져 왔으며, 국제경제기구에의 조심스러운 접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식량난은 어느정도 완화되었다는 판단하에 기술재건, 전력·석탄·금속·철도 부문 확충, 1차소비품·기초식품 및 농업생산 증대, 자연개조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중공업부문과 경공업 및 농업부문을 동시에 복구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제한된 자원과 낮은 산업가동률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로도모해 왔으며, 이는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기점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운용 체계와 관련,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①국가소유보다 느슨한 공적소유 형태인 집체소유(collective ownership) 영역을 농업이외의 부문으로 확대(제2장 제22조), ②개인의 상업활동범위를 기존의 ‘개인부업경리’에 더해 ‘합법적인 경리활동’의 영역으로 확

4) 로동신문,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 2001.11.21

대(제2장 제24조), ③독립채산제와 원가·가격·수익성 등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경제기제의 개선을 명문화(제2장 33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조치라고는 볼 수 없으나 주민들의 거주·여행 자유를 명시(제5장 제75조)했다.

한편 북한은 새헌법에서 경제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강구하였다. 북한의 새헌법의 특징은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보완하여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 상업활동 범위의 확대 및 거주·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비공식부문 경제의 역할을 우회적으로나마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의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수출 증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해 왔다. 새로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외무역주체에 사회협동단체를 포함함으로써 대외무역의 분권화(제2장 제36조)했으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기업소유형태(외국인 100%투자기업 등)를 명문화(제2장 제37조)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현실적 계획과 투자환경 미비 등 나진-선봉 지대 건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진-선봉 관련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제조업부문 위주의 초기 계획과는 달리 나진-선봉의 물류중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 확대와 다른 지역의 보세가공지역 건설 등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각종 경제관련 문헌에서 실리추구를 통한 경제정책의 효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념적 무장을 강

조하던 과거의 경직성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 한편 경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존경제도대’의 정비와 기술 개조를 거론한 것은 투자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여건을 인식하고, 실용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각종 매체는 「변혁」의 필요성과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존의 이념 및 체제 옹호적인 내용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김정일 노선」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관련 연구논문에서 상품경제와 가격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현재 ‘비공식부문 경제’로 존재하는 거래형태가 공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5) 다음과 같은 논리적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리’란 생산활동의 기회비용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내연적성장(intensive growth)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변화이다. “경제분야에서 실리라고 할 때 그것은 로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 등 모든 생산자원을 보상하고 더 창조된 유용한 경제활동결과이다.” 로동신문,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2001.12.9.

6) 2001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중자론’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신속히 전사회 영역에 확산시키고,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사상체계에 제도적 한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문학예술에서 중자란 작품의 핵이며 사상적 알맹이로서 ‘중자론’은 작품의 핵이 작품의 내용에 일관성 있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중자론’은 새로운 김정일식 사고방식과 변혁의 논리가 전 사업분야에서 핵심적인 고리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수요와 공급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가치법칙을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상품은 그 질적수준에 따라 가격이 오르 내리게 되며 가치법칙은 여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일반적으로 수요는 상품가격에 의존한다. 상품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많고 상품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적으며 이에 따라 수요는 낮은 상품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상품수요규모와 구조가 가격수준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치법칙이 어느정도로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수요와 공급의 호상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상품공급에 주는 상품수요의 적극적인 작용이다. 상품수요는 상품공급이 수요에 적응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자극하고 추동한다.7)

Ⅲ. 북한 경제정책의 분석 및 평가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의 변화는 아직 공개적이고 명확한 ‘개혁·개방’ 노선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 경제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변화’의 내용과 그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새로운 경제정책 시도를 통해 그 동안 유지되었던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완화, 지방 경제단위의 자율성 고양,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 농업원자재 공급 증대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7) 최경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의 경제적내용”,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년 제3호, pp. 16-18.

1.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분담: 지방경제의 자율권 확대

북한은 1998년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기간을 종료하고 김정일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가장 현저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는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이다. 중앙의 각 성(省)은 관리국을 통해 주요 기간산업과 기업소를 직접 챙기고, 지방 행정단위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공업과 농업부문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이다.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와 이에 따른 지방경제의 자율권 확대는 북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 조치(지방예산권의 확대, 중앙의 간여 축소)를 통해 지방경제의 자체적 관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⁸⁾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방경제와 시장기구를 접목하기 위한 과도기적 분권화 조치임과 동시에 지방경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총리 홍성남의 보고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정책변화를 명백히 했다.

모든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맡은 부문 사업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농업과 지방공업 발전에 깊은 힘을 넣어 지방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겠습니까.⁹⁾

8) 북한의 지방경제는 중앙경제기관들에 소속되어 관리·운영되는 중앙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 국가경제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주로 지방 자체의 소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수산업, 지방 건설과 상업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9) 홍성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0(2001)년 사업정형과 주체91(2002)년 과업에 대하여”, 북한 중앙·평양방송, 2002.3.27.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공업 계획권과 생산물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통해 지방예산 자율권을 보장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부문별 예산수납제는 부문별 성, 관리국이 직접 기업소의 예산수납계획 집행을 감독·관리하고, 예산단위들이 자체자금을 유보하며, 현물수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납제도와 큰 차이를 가진다. 즉 예산수납체계에서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지역·기관 본위의 이기적 성향을 제거하고, 중앙에 예측된 기업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곧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중전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는 아래 단위의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 예산단위인 성, 관리국으로부터 예산수납계획을 받아 제각기 개별적으로 직접 예산수납의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졌다. ---그러나 새로운 부문별 예산수납체계에서는 성, 관리국이 해당 부문에서의 수입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부문별 예산수납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부문 성, 관리국들이 자체의 자금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수납체계라는데 있다. --- 예산단위들이 예산활동을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벌려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체의 자금원천을 가져야 하며 그를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종래와 같은 지역별 수납체계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지역별 수납체계는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 해당지역의 정권기관체계를 통하여 예산납부의무를 수행하는 예산수납체계이며 따라서 기업소들이 바치는 수입금은 곧 국고금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역별 수납체계를 통해서 성, 관리국들이 해당 부문에서의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원천을 조성할수 없다. --- 부문별 예산수납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성, 관리국들이 아랫단위의 기업소들로부터 수입금을 직접 현물로 받아 들이는 예산수납체계라는데 있다. 종래의 예산수납체계에서는 기업소들이 지방 재정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을 바쳤기 때문에 성, 관리국들이 자기 소속 기업소들에서 조성되는 화폐자원이 제때에 정확히 예산에 동원되는가 하는 것을 옳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지방재정기관들도 중앙예산소속 기업소들의 예산수납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생산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것만큼 기업소들에 조성되는 수입금을 정확히 제때에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통제는 종래의 지방별 예산수납체계에서처럼 성, 관리국들이 아래 기업소에서의 예산수납활동을 통계상으로만 장악하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입금을 현물로 받아 들이는 경제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¹⁰⁾

이와 같이 새로운 예산수납체계를 통해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북한의 재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북한의 경우 1960년대에 지방재정의 비중이 최고수준에 이른 이래 점차 축소되었으며, 북한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70년대 말기 이후 중앙재정의 상대적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수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 북한이 채택해 온 경제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북한은 중앙집중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것이다.

10) 박성호, “새로운 국가예산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년 제4호, pp. 17-19.

<표-1> 북한 중앙 및 지방예산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년도 | 1960 | 1975 | 1980 | 1983 | 1987 | 1990 | 1991 |
|-------|------|------|------|------|------|------|------|
| 중앙 | 65.5 | 79.9 | 85.6 | 84.5 | 84.5 | 85.9 | 87.2 |
| 지방 | 35.5 | 20.1 | 14.4 | 15.5 | 15.5 | 14.1 | 12.8 |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pp. 163~65; 박완신,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1995), p. 291.

북한은 최근 중앙집중적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은 지방경제의 자율적 권한 확대와 함께 재정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2>에서 보듯이 예결산보고가 재개된 1999년의 재정규모는 1994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 지방경제의 역할 분담을 위한 자체유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정의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2001년도 196개 시·군이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0.9% 초과달성하여 중앙예산에 7억 7,984만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¹¹⁾ 만약 초과달성분을 납부했다면 지방예산수입은 86억 5,000만원 수준으로 중앙예산의 40%수준에 육박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북한 지방경제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경제는 국가경제와 관련된 주요 산업 또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했음을 반증한다고 보겠다.

한편 북한의 재정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소득

11) 북한 중앙·평양방송, 2002.3.27.

세, 감가상각회수금과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1994년 이전에는 거래수입금이 대략 60-65%, 국가기업이익금이 20%정도, 그리고 감가상각회수금과 기타수입이 그 나머지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금년도 예결산보고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총 예산수입의 대부분인 77.6%를 국가기업이익금에 의존하고 있는데,¹²⁾ 이는 과거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에 의존한데 비해 현재는 중앙이 관장하는 주요 기간산업 및 국영기업소의 이익금이 주요 세입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인민경제비가 40%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지방경제 영역 확대에 따라 중앙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중앙기업의 수 및 사업영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인민적시책비의 증가는 경제난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적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북한 중앙·평양방송, 2002.3.27.

<표-2> 북한의 재정규모와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

(단위: 북한화폐 만원, %)

| 연도 | 수입 | 지출 | 지출 항목별 비중(%) | | | |
|------|-----------|-----------|--------------|------------------|------|-----|
| | | | 인민경제비 | 사회문화비 | 국방비 | 관리비 |
| 1965 | 357,384 | 347,613 | 68.0 | 19.7 | 8.0 | 4.3 |
| 1970 | 623,220 | 600,269 | 47.0 | 19.9 | 31.3 | 1.8 |
| 1975 | 1,158,630 | 1,136,748 | 57.2 | 24.3 | 16.4 | 2.1 |
| 1980 | 1,913,923 | 1,883,691 | 60.5 | 22.2 | 14.6 | 2.7 |
| 1985 | 2,743,887 | 2,220,360 | 62.5 | 20.7 | 14.4 | 2.4 |
| 1990 | 3,565,610 | 2,732,883 | 67.5 | 18.8 | 12.1 | 1.6 |
| 1991 | 3,719,484 | 3,008,510 | 67.8 | 18.8 | 12.3 | 1.1 |
| 1992 | 3,950,092 | 3,565,610 | 67.5 | 19.6 | 11.6 | 1.3 |
| 1993 | 4,024,297 | 3,690,924 | 67.8 | 19.0 | 11.5 | 1.7 |
| 1994 | 4,160,020 | 3,950,092 | - | - | 11.4 | - |
| 1999 | 1,980,103 | 2,164,112 | - | - | 14.6 | - |
| 2000 | 2,090,343 | 2,095,503 | 40.1 | 38.2(인민적 시책비) | 14.3 | 7.4 |
| 2001 | 2,163,994 | 2,216,865 | 42.3 | 38.1(인민적 시책비) | 14.4 | 5.2 |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pp. 131~142. 1998~2001년 자료는 통일부, 『보도자료』.

중앙의 성, 관리국 중심의 주요기업소 관리체제는 그 동안의 생산조직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를 통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 1월 연합기업소, 종합기업소, 연합총국 등 종합적인 40여개 생산조직을 일반 공장, 기업소, 관리국체제로 개편한 이래 9월부터는 다시 금속·기계·화학 등 중공업부문의 김책제철소, 대안중기계공장, 남흥청년화학공장 등 20여개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연합기업소 체제로 환원시켰

다. 이는 연합기업소의 단위 이기주의 척결 및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합기업소를 해체했으나, 다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생산효율의 저하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 중앙정부 관할하의 산업조직은 성과 관리국이 필요에 따라 직속관할하에 두는 기업과 연합기업소 형태로 묶어 관리하는 기업의 형태로 나뉘어지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간조직으로 연합회사와 총회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방경제의 핵심적 관리단위는 군(郡)으로서 이는 북한이 자율적관리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를 해치지 않는 최소 경제단위를 군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은 무엇보다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인 단위로된다.¹³⁾

지방경제는 지방의 경제지도기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며 주로 지방의 원료원천과 지방적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군내 주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는 물론 석탄, 세멘트 등 일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까지도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으며---중소형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전력에 대한 군적수요를 자체로 해결하는--- 군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지방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잘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방예산제를 실시하여 군자체로 재정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나가기 위하

13) 리기반, “군을 단위로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1999년 제2호, pp. 8-10.

여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토대가 있어야 한다. ---군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경공업제품생산을 늘임으로써 국가가 국방공업과 중공업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게 한다. 경공업생산액가운데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이미 1980년대말에 이르러 53.4프로였으며 --- 1998년 현재 지방공업총생산액은 나라의 공업총생산액의 21.8프로를 차지하였다.¹⁴⁾

지방경제의 자율적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최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느정도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개혁초기 등소평(鄧小平)이 제시했던 일부지역의 선부론(先富論)과 유사점이 있는 주장으로서 지방경제간 일종의 경쟁적 노력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유연한 사고의 산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 군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군자체소득을 빨리 늘여야 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고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이룩해나감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경제적락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결정적이며 기본적인 방도는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군자체소득을 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앞선 군이 뒤떨어진 군을 도와주는 식으로는 언제가도 군자체소득을 끊임없이 늘어나갈수 없으며 앞선 군자체의 소득수준도 부단히 높여나갈수 없다. ---전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사명을 지닌 국가가 뒤떨어진 군들

14) 김성금, “군경제의 종합적발전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1999년 제4호.

에만 계속 투자를 집중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전반적인민경제발전
에 지장을 줄수 있다.¹⁵⁾

2.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한 시장경제권과의 무역 확대

북한은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1998년 9월 이후 수출실적이 저조한 무역상사들을 통폐합하고 살아남은 회사는 경영구조를 단일화·전문화 하기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상사들을 당은 대성, 군은 매봉, 내각은 광명상사 등 대표적인 상사 중심으로 통폐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북한의 전체 무역회사는 당초의 300여 개에서 120여개로 축소되되었다.¹⁶⁾ 이는 1990년대초 증설되었던 무역기관의 통폐합·전문화를 통해 수출입선의 혼란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및 국가계획 달성을 위한 개별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비현실적 계획과 투자환경 미비 등 나진-선봉 지대 건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나진-선봉 관련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제조업부문 위주의 초기 계획과는 달리 나진-선봉의 물류중개(仲介)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광 등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⁷⁾

15) 원종문, “우리 나라에서 군들사이의 경제적차이와 그 소멸의 조건”, 『경제연구』, 1998년 제4호, pp. 21-23.

16) 통일부 정보분석실, 『북한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동향평가』 (서울: 통일부), 2000. 2, p.5.

17) 중개(仲介)무역은 기본적으로 중개지(仲介地)에서 가공 또는 포장 및 상업 유통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중계(中繼)무역은 단순히 항구나 도로 등 경유로(經由路)를 제공함으로써 사용료 등의 수입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체제적 제약요인으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의 한계 및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대규모 제조업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둘째, 북·미, 북·일관계 개선의 지연에 따른 서방기업 의존적 개발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종합적 지대개발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내부자원이 부족하다. 넷째, 관광 및 무역중계부문이 제조업 영역에 비해 체제 파급효과·외화가득률·소요투자규모 및 소요시간(자본회임기간)·판로 및 원자재 문제 회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경제지원 획득을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식량과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제관련 국제기구와의 접촉면이 실무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진했던 대외경제부문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북한은 관광 및 물류중계 등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비교적 가벼운 분야에서의 대외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래 북·미 관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정에서 북한의 대서방국 의존도가 식량 및 에너지 부문에서 매우 높아졌으며,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대규모 경제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국제경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원래 자립적 민족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이다.……(그러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성 있게 조직 전개하는 것도 실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도이다.---우리는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 맞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18)

최근 북한의 변화중 가장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역은 대외경제부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비교우위 개발의 필요성과 가공무역지대 등에서의 시장기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경제적조건과 생산력발전수준이 다르고 생산물의 품종과 량에서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또한 자기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가치를 실현하고 외화수입을 높이는데 리해관계를 가진다.19)

오늘의 변화된 환경은 가공무역, 기술비결무역, 변강무역, 되거리무역, 편도무역, 맞바꿈무역 등 여러가지 무역방법을 주체적립장에서 널리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피복가공주문을 아세아, 구라파, 미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 우리가 지출하는 전력, 석탄, 물 등에 대한 가격과 류통비 특히 로력비를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정함으로써 일체 지출비용과 리득금을 정확히 규정한테 기초하여 그것을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

18)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1998.9.17.

19) 최영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대외상품교류의 조건에 관한 사상”, 『경제연구』, 1999년 제1호, pp. 9-12.

리나라에 설정된 보세가공지역에서 보세가공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²⁰⁾

가공무역지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법칙이 그대로 작용한다. 이 지역에서는 시장가격과 가격경쟁, 계약에 의한 생산 및 판매실현 등 자유시장경제법칙이 그대로 작용한다. 오늘날 발전도상나라들은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국내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공무역지대창설에 더 적극 달라 붙고 있다.²¹⁾

최근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누에고치 t당 가격은 13,874달러, 명주실가격은 42,300달러, 흰쌀은 1등급이 t당 240달러, 강냉이는 88.19달러, 콩은 183.07달러이다. 실례로 자강도지방에서는 정보당 강냉이생산량이 평균 4t이고 누에고치생산량이 1t이라고 가정한다면 누에고치가격과 강냉이가격을 대비할 때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팔아서 강냉이를 사오는 것이 같은 땅에서 강냉이를 생산하는것보다 39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한정부의 강냉이밭에서 157t이상의 강냉이를 얻는 것으로 된다.²²⁾

대외개방 정책과 관련, 북한은 나진-선봉식의 종합적 개방특구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상품수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세가공구역 또는 수출가공특구로서 가

20) 리정용,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1998년 제2호, pp. 17-20.

21) 유철남, “가공무역형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발생발전과 그 특징”, 『경제연구』, 2001년 제1호, pp. 45-47.

22) 리남선, “시대적특성에 맞게 농업의 주도적부문을 설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2001년 제1호, pp. 35-38.

장 가능성이 큰 지역은 신의주 및 인근 공업지구로 예상된다.²³⁾

한편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로 대외경제관계와 연관된 「가공무역법」, 「감문법」, 「저작권법」을 승인하였다. 「가공무역법」은 지난 1996년 정무원(현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이 일반법으로 확대·보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공무역 대상지역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적용한다는 의미와 그 동안 개별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던 가공무역을 일반 법규화 함으로써 주요 수출 증대 방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감문법」 역시 통관절차, 관세, 위생방역 규정 등이 포함된 대외 경제개방(무역증대) 관련법으로 판단되며, 「저작권법」은 북한의 저작권 보호가 일차적 목적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최근 남한과의 교류 증대에 따라 남한내에서의 북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저작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또는 남한의 저작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저작권법」 역시 향후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 및 개방에 대비한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경제의 성공적인 개방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체제의 합리화는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① 투자재원 및 생산 원자재 공급선·기술·인력의 확보, ② 북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과 국제시장 진입을 위한 노하우 확보, ③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신·수송 등 인프라 연계망 형성, ④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체제 확립 등이 필수적일 것이다.

23) 2000년도 경제건설 실적 중 평양-신의주 철도 공사, 신의주 화장품 공장, 신의주 법랑설비공장, 박천 건직공장 등 신의주 지역 건설사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의주지역의 수출 및 경공업생산 기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촌 경제관리체계의 조정: 지방공업과 농업의 상호보완적 운영

북한 농업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대 경제난에 따른 농업용 원자재의 부족과 1995년의 대홍수를 포함한 기후조건 악화 등에 의한 식량생산 부족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시기의 경제정책적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주체농법의 새로운 해석 및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체농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모내기를 하거나, 재배에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무리하게 옥수수를 심는 등의 획일적인 농업경영의 폐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농업 개혁방안으로는 ①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的作)의 원칙하에 농업생산의 구조개선 및 감자재배 방법의 혁신, ② 이모작 농업의 대대적인 추진 및 종자혁명의 추진, ③ 토지정리사업에 대한 대중동원 및 농업경영의 기계화, ④ 초식가축의 대량사육 등을 제시해 왔다.

북한은 당면한 농업생산 부진과 식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재해석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실용적 접근을 시도하

24) 정권수립이래 북한의 주요한 농업정책으로서는 1946년의 토지개혁, 1958년의 농업집단지체 완성, 196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이후 협동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의 이행, 1976년의 「자연개조 5대방침」과 1981년의 「4대 자연개조사업」, 그리고 1993년말 제3차7개년 계획의 실패에 따라 제시하였던 '농업제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25, 1996.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3년 12월 노동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의 제3차 7개년계획 실적보고에서 3대제일주의의 하나로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운 바 있으나, 1995년의 수재 등으로 인해 적극적 의미에서의 농업증산 보다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북한은 1996년부터 농장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1997년에는 당시 정무원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7~8명 단위로 분조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초과물을 현물로 농장 구성원에 분배하여 자유롭게 처분하게 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생산계획을 지난 3년간 평균수확고와 지난 10년간 평균수확고의 평균치의 90%전후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근본적인 농업 인센티브체계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는 분조관리제의 추가적 개선노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체노력으로서 북한은 중국이 개혁초기에 실행하여 농업생산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가족단위의 영농체도나 시장기구를 활용한 동기부여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노력보다는 현 체제하에서의 제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농업성 부상(副相) 한덕은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켜야 할 근본원칙은 주체농법의 주요한 요구의 하나인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며,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지도기관의 역할을 높일 것을 지적함으로써 정책변화의 한계성을 보여주었다.²⁵⁾ 중국의 가족단위 영농체계 도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북한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농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 중 25%에 불과하여, 80%를 상회하던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경제의 근간은 제조업부문이며, 제조업의 회생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의 농가소득 증가는 상당부분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향진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기회의 창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수매가격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북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기업 건설 역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멀다.

셋째, 중국의 개혁초기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좋은 기후조건과 비료와 농약, 농기구 등 농업원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 바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농촌부문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최근 토지정리사업과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집단영농 관리체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북한 문건에 나타난 북한의 농업부문 정책은 기존의 틀 속에서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군안의 국가기업 소들과 농업기술자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단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 관리운영방법에서까지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

써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로의 전환을 가장 순조롭게 하며 전환된 국영농장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된다.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단위 독립채산제는 1995년에 10개의 단위에서 1998년까지는 수십개의 단위로 늘어났으며, ---²⁶⁾

향후 과연 북한이 경제관리방식에 대한 보다 유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농업부문에 시장기구를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거래와 가격의 수요와 공급 조절기능 등 시장경제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 농업의 열악한 환경, 낮은 농업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은 농업부문의 시장화에 의한 상향식 경제활성화보다는 제조업부문의 우선적 회복을 통한 하향식 발전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자율적 관리방침이 확고히 뿌리내릴 경우, 지방경제내에서의 시장기구의 수용은 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산화 및 정보기술사업 육성: 경제관리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대

북한은 2000년에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발전 전략으로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2001년 신년 「공동사설」(2001.1.1)에서도 기술재건을 경제부문의 최우선적 과제를 밝혔다. 북한은 특히 첨단과학부문의 연구를 중시하고

26) 전명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단위 독립채산제의 본질적특성”, 『경제연구』, 1999년 제4호, pp. 42-45.

있는데, 「민주조선」(2001.10.5)은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당창건 55돌을 맞이하여 60여건의 첨단과학연구과제를 앞당겨 완성하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구과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장치 집적회로용 첨단 전자재료 생산 기술, 컴퓨터 및 프로그램 개발과 생물공학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과 교육성 프로그램 교육센터 등에 컴퓨터 프로그램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광근 무역상의 유럽방문시 유럽연합측에 대해 대규모 북한 정보통신 인력의 파견교육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현대화 방향은 시장경제권 신경제의 주축으로 간주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기술개건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경제사업의 중심고리”로 간주하면서 경제사업의 “선후차”를 따져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강조가 북한의 정보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기술발전에 기초한 산업의 연관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적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상업적 기반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고 있으며, 시장을 결여한 정보통신산업은 발전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기술개건과 산업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산망의 구축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보통신(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경제관리방식의 현대화와 관련된 전산화 작업에 가까운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따라서 지난날의 낡은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서는 현대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제작전방안타산을 바로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주체의 정치경제학과 부문별경제학, 경영학, 생산조직, 노동조직, 재정학, 등과 같은 경제지식과 경제조종학, 경제수학적모형화방법과 같은 경제과학의 지식을 깊이 있게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는것과 함께 해당 부문의 기술공학과 련관된부문의 기술공학, 컴퓨터의 리용과 관련한 기술학습을 정력적으로 하여 자기의 산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²⁷⁾

IV.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북한은 경제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 및 경제계획 체계 정비, 대외경제관계 확대, 지방경제의 자율권 확대, 기업관리체제 및 조직 개편, 토지정리사업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비공식부문 경제의 확산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등 실용적 정책 노선을 모색해 왔으나, 근본적인 체제개혁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의 합리화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가격구조의 조정 및 가격 자유화, 지방 행정단위가 아닌 생산단위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 확대, 가족단위의 영농제도 확립, 대내외경제의 연계 등이 필수적이거나,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남북관계 및 대외경제관계, 현 단계 정책의 한계성으로 인한 새

27) 리원용, “경제조직사업과 경제작전방안타산”, 『경제연구』, 2001년 제3호, pp. 12-15.

로운 정책 모색의 필요성, 북한 주민의 인센티브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비공식부문 경제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주민의 인센티브구조에 변혁을 초래함으로써 경직된 과거체제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²⁸⁾

중단기적으로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실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북한 경제난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수송·통신 등 인프라의 확충, 정부조직의 효율성 보장, 인적 자원 확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단시간 내에 북한이 자체의 힘만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경제개발 및 체제전환 프로그램 마련, 투자재원 조달, 국제사회의 협조,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및 기술 확보는 물론 북한 내부 기득세력의 보수적 성향 타파와 개혁세력의 정치적 기반 확대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실사 북한이 이와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전향적인 체제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정책적 변화가 곧바로 북한경제의 호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경제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공급탄력성이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구조 조정 및 물자 유통체계의 조정 과정에서

28) 정보흐름이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북한의 정치·사회적 통제 기제를 감안할 때 이념 및 체제 등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정보의 흐름에는 여전히 엄격한 제약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여기에서는 경제영역에서의 가격과 기회비용에 관한 정보를 가리킨다. 북한경제의 인센티브구조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서울: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9-09, 1999) 참조.

심각한 통화팽창(은폐 또는 억압된 통화팽창 현상 포함) 현상이 예상된다.²⁹⁾

둘째, 북한의 수출능력 제약과 산업불균형 및 누적되고 있는 외채 등을 고려할 때,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환율 평가절하 등의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경상수지의 균형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며, 당분간은 식량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높은 국제사회 지원 의존적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셋째, 북한 내부경제의 재원 고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자원을 재정구조의 변화나 국내저축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경제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자의 활용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과 중국·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경제관계가 더욱 발전하기에는 엄연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민간자본은 북한경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국내 축적 기제를 대체하여 북한경제 성장의 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이 시장지향적 개혁을 통한 효율적 축적 전략을 채택할 경우,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또한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와 우호적 국제환경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9) 북한경제의 공급탄력성이 낮은 이유로는 군수산업의 이상 비대화, 생산요소의 비이동성, 연합기업소 등에 의한 독점구조, 산업간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등을 들 수 있다.

V. 맺음말

최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지도부는 체제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 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이후 김정일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회생만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북한식 경제모델을 강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그 변화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정책노선 변화가 수반할 정치적 부담이 유신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책변화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직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표면상의 '강경'과 이면의 '유연'이라는 피리 속에서 점차 현상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는 유신통치 기간을 종료하고 김정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8년 이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헌법개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는 ① 중앙의 성(省)과 관리국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의 집중관리, ② 중앙경제에서 분리된 지방경제의 자체관리(독립채산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② 시장경제권과의 무역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외무역 촉진 정책, ③ 전산화와 정보기술 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관리의 현대화, ④ 토지정리사업과 군(郡)협동농장경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농촌경제의 통합적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의 변화는 그 동안 유지되었던 중앙집중적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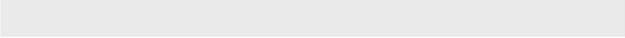
주의 계획경제제의 비효율성 완화, 지방 경제단위의 자율성 고양,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 농업원자재 공급 증대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와 이에 따른 지방경제의 자율권 확대는 북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 조치(지방예산권의 확대, 중앙의 간여 축소)를 통해 지방경제의 자체적 관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방경제와 시장기구를 접목하기 위한 과도기적 분권화 조치임과 동시에 지방경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공업 계획권과 생산물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통해 지방예산 자율권을 보장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암시장을 공식적 시장유통 기구로 전환하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가 지방경제의 소(小)계획경제화로 고착되고 만다면 북한경제의 궁극적 회생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북한정권의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동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주로 관리방식의 '조정'과 대외무역을 활용한 '실리획득(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기구의 도입과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연계를 통한 비교우위개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개혁·개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경제관리 방식의 조정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 환경적 요인의 호전에 따라 최근 2~3년간 경제상황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아직 산업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식량사정 역시 여전히 어렵다. 북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제한된 정책조정만으로 '저점균형'의 경제상황을 탈피하여 정상적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토론



제1주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제2주제: “북한의 정치: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제3주제: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제 1주제 토 론

○ 안 찬 일 (건국대학교 교수):

맑시즘을 가리켜 세 얼굴(three face)을 가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만 주체사상은 네 얼굴(four face)을 가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얼굴을 추가할지 모르지만 발표자는 이것을 전반부에서 네 단계, 즉 하나의 과정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첫 단계인 50년대 북한에서 반수정주의 및 반사대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강조된 ‘주체’와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강조된 ‘주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싶다. 김일성주석 개인에게 있어 1950년대는 기 쟁취한 권력을 고수하느냐 내놓느냐는 일종의 엄혹한 시련기였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을 거치며 주로 ‘외인부대’ 생활을 통해 대국이 휘두르는 권력의 중압감에 비애를 느끼며 주체적 역량과 국력에 대한 심한 갈증을 느껴온 김일성에게 어느날 갑자기 주어진 권력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권력을 고수하고 자신의 노선을 유지 하고자 하는 그의 생존전략이 이른바 종파분자들과의 사회적 투쟁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주체를 강도 높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중공업 우선이나, 경공업 우선이나는 발전 노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당시 웬만한 중간급 간부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으로 북한 최고 수뇌부의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김일성에 의해 그후 그렇게 규정지어졌을 뿐이다. 아직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절대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론과 발전 수준 모두

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두 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는 소련과 및 연안과의 권력도전은 위협적인 것이었다. 또 스탈린 사망 후 달라진 소련 공산당의 다극화 현상은 김일성의 권력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을 불러오고 있었다. 이상의 기간은 대체로 1955-1961(1인 지배 구축기)년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얼굴, 즉 자주노선(1961-1972 체제강화기)기에 주체사상은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발전하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성장을 체험하게 된다. 즉 이 기간은 그 이전의 권력투쟁과 그 이후의 체제위기를 모두 정당화 내지 합리화시켜주는 안정과 발전의 ‘태평성대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얼굴은 인간중심사상(1972-1982 후계체제강화기)으로 등장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치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맑시즘은 과감하게 폐기되고 그를 딛고 ‘김일성주의’로까지 주체사상은 비약하게 되지만 결국 지배자의 개인숭배논리로 멈추게 된다. 김일성이 ‘주체’라는 통치이념을 작명했다면 김정일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발전풍부화 시키고자 하는 의욕에 사로잡히면서 실천·순수의 이데올로기 본래의 사명에서 이탈하여 단순한 순수이념으로 전략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상부구조 면에서는 권력을 정당화하고 지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하부에서는 발표자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주의를 합리화하고 체제저항을 정당화 해주는 저항이데올로기로 전이하고 있다. 네 번째 얼굴은 충효논리(1982-1998 충효사상)로 이는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미화하면서 싫든 좋든 부모의 말에 따라야 하듯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황장엽은 이를 수령절대주의로 보고 있다. 주체이데올로기의 고갈은 ‘조선민족제일주의’니 ‘붉은기사상’이니 ‘강성대국론’이니 하는 무수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지

만 이는 제대로 반죽되지 않은 ‘이념의 상(像)’을 급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권위와 위신이 지닌 허구성이 그러하듯 주체사상 또한 많은 허구로 외부에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얼굴을 바꾸어온 주체사상,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백 인 학 (강원대학교 교수):

김정일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98년 개정된 헌법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가 나타나듯이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은 모든 국가기관, 단체, 인민 개개인들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서박사는 황장엽씨에 의해서 주체사상이 좀더 인간중심화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통치권력과 연계되었을 때 이데올로기화되고 교조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통치권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창안된 주체사상의 기능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체제정당화나 지도자의 우상화, 인민동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사상도 수령절대주의에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황장엽의 독자적 역할을 말하였는데 지도자의 생각을 이론화하고 사상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학자가 지도자의 지시범위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번째는 주체사상을 목표문화나 순수이데올로기로, 강성대국론도 붉은기 사상처럼 하나의 실천이데올로기 혹은 전위문화로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강성대국론에서도 사상, 정치, 군사강국, 경제적인 면에서 강성부흥을 내세우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에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정치에서의 자주와 거의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므로 강성대국의 통치사상으로 주체사상을 대치한 것에 대한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역기능적 측면을 주장하였는데,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기능적인 면이 강한지, 역기능적인 면이 더 강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조그마한 역기능적인 면을 보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전체적으로 역기능적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서 역기능적인 면이 강한지, 순기능적인 면이 강한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체사상에 혁명이론적 요소가 있다든지 남한의 주사파들이 인용해서 저항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든지, 동독에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저항이데올로기로 된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서박사의 견해에 대해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역할을 할 때에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저항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은 과연 스스로 그것을 민주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다.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백인학교수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논리적·이론적 차원에서 지적해주신 것이 몇가지 있다.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약간씩의 역기능이 있다. 또는 작은 역기능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제기해주셨는데 저는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남한에 온 상당한 수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가운데 10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평가하기를 ‘사상은 좋은데 전혀 현실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 ‘사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주체사상은 95년 이후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강성대국이 노동신문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답하고자 이 논문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신문이나 신년공동사설같은데서 보면 거의 강성대국론에 의한 북한 주민의 통제, 김정일정책의 방향제시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주체사상이 퇴조된 배경, 그 대안으로 강성대국론을 만든 배경을 분석하였다.

98년 헌법에 삭제를 안했다고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성대국을 주된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에서의 자주라는 개념이 강성대국이란 의미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그렇다면 주체사상을 계속 동등한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주체사상은 서랍속에 넣은 개념이다. 따라서 본인은 그 말은 수용할 수 없다.

황장엽씨가 주체사상을 인본주의의 개념으로 개편한 것에서 학자가 지

도자의 지시범위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황장엽씨가 쓴 글에 보면 자주노선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만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이후의 인본주의적인 개념은 자신과 자신의 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이후 남한에 와서 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한 것은 황장엽씨의 공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교수께서 주체사상을 55년에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것은 45년이었는데, 10년동안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스탈린 사망이나 대내외적인 상황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런 이데올로기로 발현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2주제 토론

○ 김 영 수 (서강대학교 교수) :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을 논의한 여러 시각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분석한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통치메카니즘과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북한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주의’와 ‘전제주의’가 유용한 개념임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신정체제론을 재해석하는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특성과 향후 변화를 다루는데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정체제(theocracy)의 역사적 연원과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의 신정체제적 특성에는 기독교적 특성과 유사한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의 모체가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통치과정에서 나타난 김일성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은 어떠했는지?

이 글에서 제시한 ‘세속화’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종교는 종교 그 자체로 정립되지 못하도록 탄압받을 때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만일 ‘세속화’에 성공하면 ‘민족종교’는 ‘세계종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정체제적 특성을 지닌 북한체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

가? 즉, 신정체제적 특성이 지닌 약점은 무엇인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종교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북한체제를 다루는 유용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즉, 종교국가의 약점은 무엇인가?

‘종교전쟁 가능성’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북한체제의 특성과 능력을 인지하고 있는 김정일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종교전쟁을 체제유지 수단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류길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 :

전현준박사의 논문은 북한체제의 작동, 앞으로의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말한 것 같다. 그러나 논문이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종교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교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술단체제 같은 것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체제분류를 하고, 종교군주제적 정치체제라고 하는 유형화를 제시했다. 여기서는 종교군주제적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메카니즘이라던가 그것이 이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정교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역시 정치의 종교화, 종교화된 정치체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종교군주제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전체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화된 정치체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북한을 보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왜 과거의 많은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자면, 논문에 나와있는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은유가 정교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이 기독교를 염두에 두었건, 다른 종교를 염두에 두었건 간에 개념의 조화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종교로써 종교화된 조직, 그것이 나라가 됐든 집단이 됐든 종교라고 본다고 해서 일반적인 속세에서 벌어지는 정치논리가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릇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소위 권력관계를 만들게 되면 어떤 정치이론이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을 종교화된 사회로 본다고 해서 북한만을 설명하는 특별한 이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에 있는 정치학 이론들을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북한에 적용해야한다.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정

치논리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사장으로서의 김정일이 존재하고, 밑에 신도들로서 인민들이 존재하고, 사제단이라고 하는 당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정치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들을 쓸 때 종교화된 정치체제는 언제 등장한 것인가, 그러한 체제를 만든 데에는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치화된 종교나, 종교화된 정치나에 대한 의견에 대해 본인은 정치가 종교화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종교성을 띄기 위해서는 일단 믿음체계와 의식체계, 사회관계를 가져야한다고 대체로 종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믿음체계속에 넣을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체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의 논쟁도 있지만, 주체사상의 정수라는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일지배체제와 다른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수령과 당과 인민이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이런 삼위일체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절대성만이 작동논리가 되어있다. 이것은 종교적 수령이고 수령을 믿고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종교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종교자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내세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이든 뭐든 간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성이 강하게 내재 되어있는 정치체제라고 볼 수 있다. 또 의식체계를 보면, 대체로 종교에서는 신에 대해 의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북한을 보면 수령에 대한 찬양이나 참배, 감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종교적 행태와 유사하다. 사회관계 역시 조직생활이란 것이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있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이 단지 통제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한다기 보다는 종교를 전파시키고 신심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관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종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치체제가

종교화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한층 심하다. 현재 본인이 보기엔 이단으로 보는 미국과 타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앙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준거들이나 학술적 개념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3주제 토론

○ 박 순 성 (동국대학교 교수) :

북한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하여 지속과 변화라는 두 관점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비교적 균형된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화쪽에 중점을 둔 논문이다.

먼저 과연 1990년대 김정일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000년대 경제정책은 1990년대의 경제정책의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만일 실패의 교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현 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경제가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최근 북한경제는 제도약의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다. 오승렬 박사도 말하였지만 북한경제의 회복에 대한 논쟁이 남한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었고 또 이점은 북한경제정책이 북한 경제현실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의 변화조건, 혹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성공의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북한경제에 대한 학문적 과제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대북한

정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승렬박사는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990년대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북한식 경제정책을 발전했다고 말하였다. 특히 국가경제력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90년대 일어났던 상황변화를 수용하고 있고, 이 상황변화의 수용이라는 것은 경제체제의 이완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방식이 조정되고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이 조정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동적, 피동적인 변화이다. 즉 김정일 노선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경제정책은 현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답변은 북한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 자본축적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승렬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저점균형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로 재정, 무역, 농업, IT산업 등을 들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한 정책변화를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단기·중단기·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내적인 조건, 환경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되며, 논리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제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인이 오승렬박사의 논문을 읽은 방식이다.

이것이 맞다면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은 체제붕괴를 두려워하며 소극적 정책에 머물러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 북한의 경험으로부터 북한지도부

가 충분한 경험을 못 얻었다는 답변이 될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0년대에 대한 북한자신의 평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은 1990년대의 자기자신의 반성보다는 1980대 후반에 대한 반성, 동구사회의 붕괴에 대한 교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또한 1990년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 어떤 것인지도 언급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저점균형에 머물러 있고, 저점균형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새로운 경제정책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관성이 있는 듯 하지만 상충되는 논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를 중시하고 있는데 대외경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자원을 충분히 획득하면 개방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개혁으로 갈 것이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관리방식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조정을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개방을 위한 체제정비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방식이라는 것도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세 번째는 과연 대외지원이 중요하다면 북한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충분히 대외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차원에서는 대외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치·군사적인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학자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정책과 정치·군사정책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주길 바란다.

○ 정 형 곤 (동국대학교 교수) :

오승렬박사의 논문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본격적인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크게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누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본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의 협력확대와 국제적 비교우위에 의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내정책에 있어서도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 기업관리 및 조직체제의 개편,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1990년대에 북한의 계획경제가 크게 훼손되면서부터 시작된 변화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은 동유럽과 구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계획에 의한 대외무역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기구를 개편하고,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시장지향적인 무역을 추진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대내정책에 비교해서 훨씬 더 변화의 폭이 넓고, 현실적이며, 시장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내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대외부분 만큼의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훨씬 작고, 소극적이다. 오박사는 대내경제정책의 변화중에서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권화가 시장경제의 접목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지역간의 부의 편차도 인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분권화에 의

한 경제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등소평의 선부론과도 연관해서 시장경제의 접목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권화 조치가 나온 배경도 역시 북한의 계획경제의 붕괴에서 초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99년의 인민경제계획법이 나온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사실상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은 북한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경제계획은 당연한 일인데, 인민경제계획법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은 90년대에 경제계획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중앙에서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자, 계획의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계획의 일부를 지방에 위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계획이란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조치로 북한은 99년의 인민경제계획법 제3장에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분리하고, 계획의 심의주체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때 만들어진 법안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분권화가 의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위원장의 현지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지도도를 통해서 당이 경제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적인 위치에서 총괄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은 상품의 가격과 이자율, 세율등으로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추진되고 있는 분권화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은 회의적이다.

또하나 주목할 것은 북한의 분권화가 오박사의 의견과 같이 중국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과거 동유럽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때 마다 경제적 의사결정권의 분권화를 통해서 주어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했던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60년대 구동독의 신경제메카니즘, 68년과 80년대의 헝가리의 개혁, 80년의 폴란드의 개혁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분권화는 권한의 남용과 책임회피를 위한 권한회피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중앙집권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권화가 시장경제와 결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분권화 조치가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향후 시장경제로 전환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권화나 중앙계획의 양을 줄이거나 이에 중앙계획을 없애는것 만으로 시장이 자연적으로 더많이 형성되고, 시장경제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다른말로 교환경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환이전과 교환이후의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보장될 때, 즉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이때 시장의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행정적 분권화만으로 시장은 형성될 수 없다.

○ 오 승 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0년대 북한이 겪은 교훈은 변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데 대한 확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느끼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이 살아있다면 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90년대 있어서의 김정일 정권의 과제는 북한경제의 회생도 중요한 과제였지만 정권 과도기에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94-98년까지 유혼통치라는 기간으로 불리는 시간들은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버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라는 것이 북한에서 시간 낭비였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북한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때 개혁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처한 환경을 볼 때,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된 변화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개혁·개방을 내일 당장 한다고 해도 북한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개방이 하루아침에 북한경제를 회복시켜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들, 주변환경, 투자재원, 인적자원 등 어느 것 하나도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들어설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대외지원관계에서 북한이 정치·군사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협상을 통해서 대외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지방분리현상이 떠밀려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고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였는데, 북한의 지방분리현상에 대한 노력은 북한자체로 보면 매우 큰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혁개방조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며, 게다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지방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암시장과 지방경제의 분리가 결합한다면 나름대로 북한의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종자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즉 핵심을 틀어잡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버리자는 것이다. 서방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을 틀어잡고 덜 중요한 것은 버리자란 말은 변화하자란 말과 통한다. 특히 작년말부터의 매체를 보면 북한에서는 50년으로 돌아가자란 말이 많이 나온다. 북한의 유일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은 60년대부터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의 다양한 노선제기, 지방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자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회적인 김일성 노선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 이 숙 자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

지금까지 북한의 현주소, 그 지배이념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북한사회는 1998년 개정된 헌법서문에서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주체사상, 수령절대론, 영생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절대전제정치체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강성대국론이 주체사상을 대치하는 그 지배이념이든 아니면 정책대안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해치는 정치이데올로기를 녹여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교조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과감히 국제화 세계화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요원하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개방화만이 북한을 살리고 남북한 통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북한권력층은 인지해야 한다. 북한은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적 특성에 맞추어 변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평화정착을 시키기 위해 진일보한 남북한 발전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적극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